

이슈브리프

- 생활속 느낌의 미학 슬로 시티 : 도심형 올레를 통한 여성성의 구현
김 영 국 (한국교통연구원 미래도시연구센터)
- 낙태, 그녀의 어렵고 힘겨운 결정
이 윤 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공직사회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 현황 및 과제
정 만 석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장)
- 아동성폭력 현황 및 피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방안
윤 덕 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사각지대
김 영 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웃자고 보는 예능 프로그램 속, 죽자고 까칠해질 수밖에 없는 은근한 성역할 고정관념의 현실
김 지 은 (한국 여성의 전화 소식지 <베를 II> 편집위원)

생활속 느림의 미학

슬로 시티 : 도심형 올레를 통한 여성성의 구현

김영국 | 한국교통연구원 미래도시연구센터

1. 치타슬로

슬로 시티(Slow City)로 알려져 있는 느리게 살기 운동의 시작은 행복하고 달콤한 인생을 구현하는데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을 우려한 이탈리아의 몇몇 시장들이 모여서 1999년 만든 치타슬로(Cittaslow)에서 비롯되었다. 짐작한 바와 같이 이탈리아어 Citta는 영어의 시티를 의미하며 Slow City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신안군 증도, 완도군 청산도, 장흥군 유치면, 담양군 창평면, 하동군 악양면, 예산군 등의 지역이 슬로 시티로 지정되어 있다. 슬로 시티와 유사한 느리게 살기 운동 (Slow Movement)은¹⁾ 슬로 관광, 슬로 푸드, 슬로 스쿨, 슬로 북, 슬로 머니, 슬로 리빙(Living) 등을 포괄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향해 전방위로 그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 슬로 시티의 주요 지향점은 자연생태 보호,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 천천히 만들어진 슬로 푸드 이용, 지역 특산물 및 공예품 이용, 그리고 지역민이 중심이 되어 정직하고 진정성 있는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등, 생각은 글로벌(global)하게 행동은 지역(local)에 바탕을 두는, 즉 glocalization (세방화)을 향하는 것이다.

슬로 시티의 로고는 느림의 대표격인 달팽이가 마을을 등에 지고 가는 형상이다.²⁾ 슬로 시티의 모토는 'International network of cities where living is easy'로 여유있는 삶, 즉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것이다. 삶의 질을 논함에 있어 느림의 중요함은 몇 번이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인생에 있어서 좋은 기억들을 잠시 떠올려 보면 대부분이 느리게 진행되었던 일들과 연관되어 있음을 쉽게 알아챌 수 있

1) 느리게 살기 운동과 관련한 정보 (Slow Travel, Slow Food, Slow School, Slow Book, Slow Money, Slow Living)는 슬로 무브먼트 홈페이지에서 참고했습니다. <http://www.slowmovement.com/>

2) 로고는 치타슬로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http://www.cittaslow.net/>

다. 오랫동안 혼신의 힘을 다한 연애, 아이들이 태어나고 성장해 가는 과정, 그리고 한국의 슬로 푸드인 잘 숙성한 김치, 곰삭은 장아찌와 젓갈이 내는 맛, 이런 느린 귀적이 가져다 주는 인생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 모두 삶의 질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느낌을 이야기할때 걷기는 필수적이다. 어느 시인은 “어둠이 뭉텅뭉텅 내려와 산 위에 툇툇 걸터앉은 모습을 보며 혼자 하염없이 걷는 날이 있었다”³⁾고 젊은 시절을 회고했다. 필자 또한 꽤나 발품을 팔아 길을 찾기 위해 돌아 다녔다. 나라 안팎의 여러 지역들 가운데 아직 기억의 한켠에 오롯이 남아 있는 것들은 대부분 걷는 속도와 관련이 있다. 골목을 따라 걸으면서 만났던 촌로와 아이들이 보내주었던 웃음, 마을 어귀 장터에서 사먹었던 음식들, 길가에 핀 꽃들과 시냇물 소리, 이런 경험은 걸음 걸이의 속도가 아니면 좀체 만나기 어려운 경험이다. 하지만 누구든 걸기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체할 수 있고, 그 다정하고 온화한 기억은 우리의 인식너머 저편에 저장된다는 측면에서 보편적이고 또한 공정하기까지 하다.

〈표 1〉 슬로 시티 지정 지역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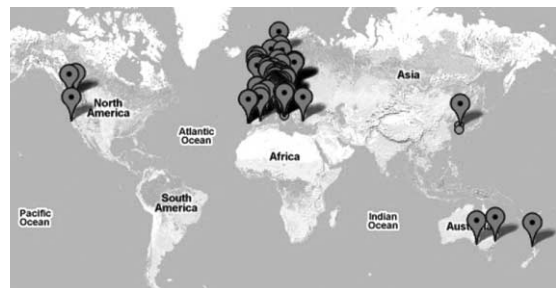
국 가	지 역 명
Australia (2)	Goolwa, Katoomba
Austria (3)	Enns, Hartberg, Horn
Belgium (4)	Chaufontaine, Enghien, Lens, Silly
Canada (2)	Cowichan Bay, Naramata
Denmark (1)	Svendborg
France (1)	Segonzac
Germany (10)	Bad Schussenried, Deidesheim, Hersbruck, Lüdinghausen, Marihn, Nödlingen, Schwarzenbruck, Uerlingen, Waldkirch, Wirsberg

3) 도중환, 나의 삶 나의 시 (한겨레 신문에 연재중)에서 인용했습니다.

걷기가 가져다 주는 풍성하고 다양한 효과는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져 왔으므로 여러말 덧붙일 필요는 없겠다.

치타슬로 인터내셔널의 자료에 의하면 1999년 이래 20개국 134 개 지역(2010년 9월 기준)이 슬로 시티 회원이 되었으며 그 위치와 지정지역의 명칭은 아래 그림 1 및 표 1과 같다. 이탈리아에서 시작한 운동이므로 현재까지 지정된 슬로시티는 주로 유럽에 분포하고 있으나, 최근 그 지정 영역이 북미,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한국 등으로 확장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1〉 세계 슬로 시티 지정 현황



국 가	지 역 명
Great Britain (8)	Aylsham, Berwick upon Tweed, Cockermouth, Diss, Ludlow, Linlithgow, Mold, Perth, Sturminster Newton
Holland (3)	Alphen-Chaam, Borger-Odoorn, Midden-Delflan
Italy (68)	Abbiategrosso, Acqualagna, Acquapendente, Altomonte, Amalfi, Amelia, Anghiari, Asolo, Barga, Borgo Val di Taro, Bazzano, Bra, Brisighella, Bucine, Caiazzo, Capalbio, Casalbeltrame, Castel San Pietro Terme, Castelnovo nè Monti, Castelnuovo Berardenga, Castiglione del Lago, Castiglione Olona, Cerreto Sannita, Chiavenna, Chiaverano, Cisternino, Città della Pieve, Città Sant'Angelo, Civitella in Val di Chiana, Fontanellato, Francavilla al Mare, Galeata, Giffoni Valle Piana, Giuliano Teatino, Greve in Chianti, Guardiafrede, Levanto, Massa Marittima, Monte Castello di Vibio, Montefalco, Morimondo, Novellara, Orsara di Puglia, Orvieto, Pellegrino Parmense, Penne, Pianella, Piossasco, Pollica, Positano, Pratovecchio, Preci, San Daniele del Friuli, San Gemini, San Miniato, San Potito Sannitico, San Vincenzo, Santa Sofia, Scandiano, Stia, Suvereto, Teglio, Tirano, Todi, Torgiano, Trani, Trevi, Zibello
New Zealand (1)	Matakana (Rodney District)
Norway (3)	Eidskog, Levanger, Sokndal
Poland (6)	Biskupiec, Bisztynek, Lidzbark Warminski, Murowana Goślina, Nowe Miasto Lubawskie, Reszel
Portugal (4)	Lagos, Sao Bras de Alportel, Silves, Tavira
South Korea (6)	Hadong, Damyang, Jangheung, Sinan, Wando, Yesan
Spain (6)	Begur, Bigastro, Lekeitio, Mungia, Pals, Rubielos de Mora
Sweden (1)	Falköping
Switzerland (1)	Mendrisio
Turkey (1)	Seferihisar
USA (3)	Fairfax, Sebastopol, Sonoma

2. 한국의 슬로 시티

슬로 리빙 또는 슬로 라이프에서 파생된 새로운 관광 개념이 슬로 관광(Slow Tourism)이다. 이는 기존의 관광이 정해진 시간에 될 수 있는 한 많은 관광지를 방문하여 눈도장 혹은 기념사진을 경쟁적으로 찍어대는 관광행태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슬로 관광은 느림, 여유, 넉넉, 남음과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초록의 공간, 농촌과 자연속에서 이루진다는 측면에서 자연관광 또는 녹색관광이라 부르기도 하

고 생태계의 보존과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생태관광이라 칭하기도 한다. 이 모두를 아울러 자연환경과 인문학적 유산의 보존, 그리고 현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흔적을 지난 역사에 반추하여 훼손으로 간주되지 않을 정도로만 변형을 허락하는, 그리하여 소위 실질적인 지속가능함이 성취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신안군 증도는 아시아 최초로 지정된 슬로시티로 우리나라 최대의 갯벌전원이 있는 곳이며,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환경을

보유한 곳이다. 한때 화학소금에 밀려 갯벌소금 즉 천일염이 인류에 베푼 생명가치를 망각했던 적도 있으나, 증도에서 나는 소금이 미네랄이 풍부하고 맛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면서 옛명성을 회복중이다.

완도군 청산도는 <서편제>를 빼고 이야기 할 수 없다. 유봉 일가가 돌담길 따라 내려오면서 부르는 진도아리랑은 자연과 길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 내는 조화의 극치를 보여준다. 서편제 이후 근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청산도의 돌담은 여전히 전하며 옛 장례풍습인 풍장과 푸른바다가 만들어 내는 슬로푸드가 함께하는 곳이다.

장흥군 유치면은 슬로푸드의 고장이다. 이곳은 전국 최대의 노지재배되는 표고버섯 생산지가 있고, 지령이 분변토를 이용한 친환경농법과 유기농법으로 건강하고 진실한 먹거리 공급의 거점지역이라 할 만하다. 인근에 비자림산림욕장, 유치자연휴양림, 지령이생태학습장에서는 슬로한 삶을 위한 휴식과 학습을 함께 할 수 있다.

지리산 자락 하동군 악양면의 하동녹차는 야생녹차밭에서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법으로 생산되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쉼어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낸다. 예로부터 진상품으로 그 맛을 인정받았으며, 세계슬로시티연맹의 공식지정 특산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왕이 즐긴 차향과 차맛이 오늘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할 뿐아니라 미래 세계인의 슬로 라이프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대나무의 고장 담양군 창평면 일원은 전통과 생태가 잘 보전되어 있고, 전래의 먹거리가 풍부하며 지역 주민에 의한 다양한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룬 지역이다. 인근에서 생산되는 죽염을 이용한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등 전통장의 맥을 잇고 있으며 창평한과와 쌀엿은 슬로 푸드의 또다른 전형을 보여준다.⁴⁾

3. 슬로 관광의 대명사 제주 올레

제주 올레는 걸어서 여행하는 이들에게 걷기 좋은 길을 대표하는 명사가 되었다. 올레는 집 대문에서 마을 길까지 이어주는 좁은 골목을 뜻하는 제주언어이다.⁵⁾ 비슷한 우리말로 고샅, 토담길, 오솔길, 골목 정도가 있고 의미상으로는 골목과 올레가 가장 잘 통한다. 올레는 제주에서 쓰이는 보통명사이므로 올레 뒤에 길을 붙이는 것은 역전앞과 같은 유의어(類義語)를 필요없이 반복하는 일이므로 이런 쓰임새는 마땅하지 않다. 올레가 지금의 명성을 갖게 되기까지는 사단법인 제주올레의 이사장인 서명숙님의 노고에 힘입은 바 크다. 나는 그녀의 블로그를⁶⁾ 통해 그녀가 올레를 꿈꾸게 되었던 이유부터 고향땅 제주로 내려가 올레를 손수 개척해 나갔던 지난한 역사를 모두 알게 되었다. 전직 기자인 그녀는 스페인과 프랑스 국경지대인 생 장피드포르 (St. jean-pied-de-port)에서 시작해 피레네산맥을 넘어 성 야곱의 유해가 안치된 대성당이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Santiago de Compostela)까지 900킬로미터의 도보여행을 꼼꼼히 기록하였다.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그녀가 그렇게 찾던 길이 이국땅 멀리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는다. 그녀는 깨달음에 멈추어 있지 않고 여기서 얻은 영감을 그리고 진정한 깨달음이라면 당연히 동반되어야 할 행동

4) 관련 자료는 한국슬로시티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했습니다. <http://www.cittaslow.kr/new/main.php>

5) <http://www.jejuolle.org/main/main.jsp>

6) <http://blog.ohmynews.com/noalchol/>

을 고향인 제주에서 실행하기로 한다. 그 결과가 제주 올레이다.

제주 올레는 2007년 광치기해변에서 시흥초등학교에 이르는 길이 15km의 제1코스를 개장한 이래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제주 남부 지역의 마을길, 해안도로, 오름(제주의 기생화산)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코스가 개발되고 있다. 제주 올레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0년에 제 16코스를 비롯해 10-1, 14-1, 18-1코스 등 4개의 코스가 추가되었다. 이로써 오로지 걷기만으로 제주도의 자연과 그 안에서 빚어진 문화와 삶을 체험하는 총 연장 300km가 넘는 올레가 완성되었다. 올레가 제주 남부지역의 범위를 넘어서 중산간지역, 한라산과 제주북부까지 포괄하여 한국의 도보여행 성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제주사람의 삶이 스며든 각 지역의 유래, 전설, 설화, 그리고 자연과 사람의 상호작용이 녹아 있는 “스토리텔링”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올레 1~12코스에 걸친 60여개 마을에 대한 스토리텔링 조사자료는 제주 올레 홈페이지의 올레소식 게시판에서⁷⁾ 누구든지 내려받아 읽어볼 수 있다. 스토리텔링은 일종의 의미부여의 과정이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까지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으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는 꽃으로 나에게 다가온다.⁸⁾ 대상으로 존재하던 것이 스토리텔링을 통해 가슴으로 전달되고 의미로 머리에 기억되는 것이다. 걷기라는 가장 느린형태로 진행되는 올레와 그 속에 숨은 진주처럼 펼쳐져 있는 보석같은 삶의 이야기들의 조합은, 몸과 마음을 즉 행동과 정서를 천천히 버무려 삶이 경험할 수 있는 지극한 풍요로

움을 창조해 낸다.

방랑벽이 있던 필자도 오래된 미래로 알려진 히말라야 자락의 라다크 지방, 인도 북서부, 캄보디아 앙코르왓 등 여러 지역을 발품을 팔아 돌아다닌 적이 있었다. 해발 5000미터가 넘는 곳에 위치해 세계에서 가장 높이 있다는 도로 카르동 라(Khardung La)와 창 라(Chang La)를 넘으며 고산증세로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머리속을 맴도는 생각은 이 길(路)이 내가 찾는 길(道)인가였다. 길을 찾기 위해 시간과 돈과 화석연료를 태워 머나 먼 곳까지 왔지만 이 길이 나의 길이라는 확신이 오지 않았다. 오히려 삶의 일상에서 도피한 자의 자괴감만이 넘실거렸다. 이후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밖으로 떠돌던 날들을 마감하고 일상에서 길을 찾기로 여정을 조정하였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공부는 연구실과 집을 쳇바퀴 돌듯 오가는 생활이었으나, 학교 아파트 인근 자전거 도로를 따라 나만의 걷기 루트를 만들고 연구실 주변 건물 사이사이 길을 연결하는 도보로를 개척하여 걷기를 삶의 일상으로 끌어들었다. 봄에는 애들 손을 잡고 나가 달래를 캐고 오디를 따먹고 겨울에는 눈썰매를 함께 타면서 가족이 공유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거리를 만들었다. 지금 살고 있는 동네 성북구에서는 개운산 둘레길을 걸으며, 개운산 자락이 품고 있는 동네와 둘레길 곳곳에 있는 오래된 배드민턴 클럽, 테니스 클럽, 여러가지 운동시설들과 이곳을 등지 삼아 일상을 영위하는 어르신들을 만나며 나만의 동네 올레를 찾고 있다.

7) http://www.jejuolle.org/board/list.do?GROUP_NO=6

8) 김춘수, 꽃에서 인용했습니다.

4. 도심형 올레

제주 올레의 걷기를 통한 관광과 건강 그리고 정서적 안정감까지 여러 목적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알려지게 되면서, 각 지자체 마다 올레와 유사한 걷기여행코스에 대한 계획 발표가 우후죽순을 이루고 있다. 삶의 질을 보장하는 슬로 시티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역별로 운영 또는 계획되고 있는 슬로 시티형 걷기 좋은 길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코스가 위치한 자연, 인문학적 상황에 따라 관광형 올레와 도심형 (또는 도심형) 올레 구분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여행객을 위한 자연 감상형의 걷기여행 코스가 중점인 곳은 여행형으로, 거주민의 도보환경을 개선을 포함하면서 잘 보전된 도심의 인문환경을 관광 자원화한 생활밀착형 걷기길의 경우는 도심형으로 구분하였다. 정보력의 한계로 인해 아래 표에 언급된 내용은 전국의 모든 계획/운영 중인 걷기 좋은 길을 다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여행형, 도심형의 구분도 임의적인 것임을 밝혀둔다. 국내에 슬로 시티와 슬로 투어리즘에 관한 몇몇 연구가 있으나⁹⁾, 걷기 좋은 길에 대한 개념적 그리고 실증적 연구의 폭과 깊이는 일천하다. 관광형과 도심형 올레에 대한 최소 시설 기준 및 편의 시설 설치에 대한 가이드 라인 또한 없는 실정이다. 보행약자로 분류되는 어린이, 노약자, 여성에 대한 걷기좋은 길로의 접근권이나 이용권에 대한 논의 또한 찾아보기 힘들다. 이들 기준이나 시설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원용할 수 있겠으나, 도보로 또는 인도로 분류될 수 있는 걷기좋은 길이 동법이 규

정하는 편의증진 대상시설에 포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도심형 올레의 경우 주거지와 인접해서 계획될 여지가 많기 있으므로 보행약자들이 이용하기에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개운산 둘레길은 이용자의 구성 및 시간대¹⁰⁾, 구역내에서 일어나는 활동의 종류 등 다양한 측면에서 관광형 올레와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여행형과 도심형 올레는 분명히 다른 이용 목적, 노선 선정, 설계 기준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도심형의 경우 보행약자의 접근성과 이용을 제고를 위해 계획단계에서부터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계획된 도심형 올레는 즐거운 걷기를 일상화시키는 도구로 작용할 것이다. 거주지에서 반복되는 걷기와 같은 일정한 행동패턴은 정서적 반응과 함께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 동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즉, 자주 마주치는 주민들과 눈인사를 나누며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느낌', 자기만의 루트를 블로그를 통해 소개하면서 '뭔가 가슴이 뿌듯한 느낌', 이러한 느낌이 동반된 걷기는 스토리텔링이 체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즉 나의 삶이 의미있는 이야기로서 존재할 수 있는 시점이며, 좀더 거창하게 리추얼(ritual, 儀式)로 존재하기 시작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리추얼은 일상에서 반복되는 행동이 일정한 정서적 반응과 의미 부여의 과정이 동반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종교의 예식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의미있는 느낌이 동반된 걷기행위가 시작된 시점부터는 길은 단순한 길(路)이 아니라 인생의 길(道)이 된다. 어느 심리학자는 '리추얼이 다양한 삶은 풍요롭다. 느끼는 정서의 차원이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9) 전명숙 (2009), 슬로우 관광의 탐색적 고찰: 제주 올레투어 걷기여행을 중심으로, 한국관광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조영태, 박경문, 최상희, 장인식 (2008), 국내슬로시티 발전방안연구, 지리학 연구

신명석, 서정태 (2007), 슬로우 투어리즘의 전망과 과제, 관광연구저널

10) 개운산 정상부근에 위치한 천막으로 된 간이 헬스클럽은 새벽 3시에 열고 아침7시가 되면 닫는다.

말했다.¹¹⁾ 필자는 삶의 현장 곳곳에 일상의 현장 마 하여 새롭달콤한 다양한 리추얼이 올레를 통해 생성 다마다에 각자의 스토리텔링이 쌓일 수 있는, 그리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표 2〉 운영 및 계획 중인 전국의 걷기 좋은길 코스 현황

구 분		명 칭	특 징
여 행 형	운 영	제주 올레	325.4km/20개 코스
		지리산 둘레길	지리산 둘레 순환형 300km
		지리산 언저리길	둘레길에서 빠진 뱀사골, 벽소령, 청학동 등 24개 코스 263km
		동해안 바우길	대관령 옛길과 정동항을 잇는 트레킹 코스
		강화도 나들길	심도가는길, 바닷가 돈대길, 고려왕릉 길
		군산 구불길	금강, 망해산, 대야들, 옥산저수지를 주제로 한 4개 코스
		부안 변산 마실길	18km / 3개 코스
		하동 토지길	31km / 2개 코스
		관동별곡 800리	고성~울진
		기타	무의도 올레길, 퇴계 오솔길(녀던길)
	계 획	동해안 낭만가도	240km /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2012년 예정
		진안 마실길	216km / 16개 코스
		소백산 자락길	110km / 영주 죽령, 소수서원, 부석사
		영덕 블루로드	약 50km / 17시간 소요, 3개 코스
		남도 갯길	300km / 16개 코스(영광굴비길, 천일염길, 해수찜질길)
		충남연가	582.7km / 3개 코스, 2012년 완료
도 시 형	운 영	종로 고살길	전통문화와 서민의 삶을 주제로 20개 코스 발굴
		시흥 늪내길	숲길, 갯골길, 해안길, 물길, 들길 등 수도권 최장거리 도보길
		북한산 둘레길	63.2km 중 44km 개통
		무등산 옛길	11.87km / 2개 코스
		대구 올레	18.5km / 3개코스 개통
		광명 가림산 둘레길	26km
	계 획	서울 둘레길	내사산과 외사산을 연결하는 202km의 산책로, 2014년 완공 예정
		남한산성 둘레길	21km, 2014년 예정
		하남 둘레길	2011년 예정
		원주 걷기여행길	127.2km / 8개 코스

11) 김정운,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 영원히 철들지 않는 남자들의 문화심리학」에서 인용했습니다.

5. 아파트에 들어온 슬로 바람

아파트는 한국의 주거양식을 대표하는 단어이다. 아파트는 토지이용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그러나 최근 소위 살기좋은 아파트의 설계 경향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분명히 슬로 시티의 개념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은 필자가 몇 주전 회의차 들렀던 도심의 한 아파트 외부 공간이다. 기존의 아파트와 차별화된 요소로 우선 차량 동선과 주차장이 모두 보행공간 아래로 내려가 지상층에는 차를 볼수가 없다. 어린이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안전이 크게 개선되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둘째, 자연적 요소를 최대한 고려하여 보행로를 조성하였다. 위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걷기의 일상화와 함께 자연과의 리추얼이 시작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또한1층 전체를 필로티(piloti)로 조성해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하고, 단지내 모든 턱과 단차를 없애 보행자, 휠체어, 유모차, 자전거가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아파트도 있다. 이러한 슬로 시티 개념이 내재된 아파트는 분명히 토지이용 극대화라는 아파트 고유의 목적과는 위배되지만, 현실점에서 가장 잘 나가는 아파트임에는 분명하다. 짐작컨데 설계직 및 건축직에 진출한 우먼파워가 이

〈그림 2〉 슬로 시티형 아파트 공간 (예)



끌어낸 변화라 생각한다.

남성성으로 상징되는 20세기의 산업발전과 도시 개발은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여러 대형 혐오시설이 필수불가결하게 입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에 따른 갈등이 넘비(NYMBY: Not In My Back Yard) 현상을 초래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생명을 잉태하고 키워내는 여성의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은 나와 남을 살리는 기본 요건일 것이며, 슬로 시티가 지향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는 도시가 정주공간으로 역할하는데 필요한 충분 조건일 것이다. 진정한 변화는 거창한 구조나 슬로건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일상속에서 일어나는 어찌면 사소해 보일지도 모르는 일들, 즉 아이의 손을 잡고 걷기에 편안하고 정겨운 길을 따라 장을 보러가는 일, 아파트 옥상, 베란다, 앞마당 어느 곳이든 남아있는 자투리 땅에서 키우는 푸성귀, 세월의 흔적이 곱·여진 느리게 숙성된 음식들, 이들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통해서 변화가 일상의 삶속에서 구현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는 모성과 여성성의 영역이다.

글로컬(Golocal: Global + Local)한 21세기, 진정한 발전의 의미를 되새기며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를 현재 삶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에서, 즉 내 집안 우리 마을에서 시작하는 심비(SYMBY: Start In My Back Yard)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그 영향력이 이웃으로 신비하게 전이되기를 그리고 슬로 시티를 지향하는 세기적 변화와 그에 수반되는 역할이 이땅의 모든 어머니와 여성들의 몫이 되기를 기대한다.

낙태, 그녀의 어렵고 힘겨운 결정

이 윤 상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낙태¹⁾는 왜 사회문제가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선택권(결정권)/생명권의 이분법적 대립 구도로 낙태 논쟁을 진행시키는 것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프로라이프 진영의 생명권 주장의 허구와 왜곡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대응하다보니, 이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프로라이프 진영은 낙태를 ‘범죄행위’로 구성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²⁾. 하지만 낙태가 인류에게 오래전부터 범죄행위였던 것은 아니었다. 자료를 참고해보면, 지금 낙태를 살인행위로 규정하며 철저히 금지키시키고 있는 카톨릭계가 처음부터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초기 교회에서 낙태를 금지시켰던 것은 낙태가 살인이어서가 아니라 생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성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서였으며, 수정순간부터 생명체이므로 일체의 낙태를 살인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이후의 일일 뿐이다³⁾.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오스트리아 등에서 낙태를 범죄화하는 법률이 마련된 것은 모두 19세기에 이루어진 일이며, 이 때에도 생명에 대한 윤리적 이유보다는 산모의 건강과 안전이나 국가의 인종보전 등의 이유로 낙태를 금지하였다. 낙태를 범죄화하기 시작했던 19세기의 움직임은 20세기에 들어 부분적

1) 개념어 논쟁에서 ‘낙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적금의 논쟁에서 ‘임신중단권’, ‘임신중단/지속권’ 등 다양한 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결정하는 여성이 주체가 되는 용어라는 점에서 새롭게 검토해볼 만하다. 이는 앞으로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며, 나는 지금까지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지혜 활동가가 제안한 ‘임신결정권’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논의를 거쳐 합의하기 전이므로 이 글에서는 낙태를 사용하기로 한다.

2) 이들은 낙태를 금지시키는 낙태죄가 있어야 하고, 이를 강력하게 실행시킴으로써 낙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낸다.

3) Jon O'Brien(2008), 'Presenting the case for conscience', Abortion Review (Abortion, Ethics, Conscience and Choice), bpas

인 낙태 합법화 움직임으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프랑스에서는 1920년도에 금지시켰던 낙태를 불과 30여년만인 1955년,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는 조항을 통과시켰다. 낙태 합법화는 60~80년대를 거치면서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등지에서 논의가 지난하게 이어졌고, 1967년 영국에서 낙태 합법화 법안이 통과된 이후 여러나라에서 뒤를 이어 낙태 합법화 법률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⁴⁾. 미국의 경우도 19세기 초 위험한 낙태관행으로부터 여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낙태금지법이 제정되기 시작하였으며, 20세기에 들어 낙태를 부분적으로 합법화하는 법률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⁵⁾.

간단히 살펴본 근대유럽이나 미국의 역사는 낙태를 범죄행위로 단죄한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낙태를 법으로서 금지시키기 시작한 이유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배아/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었던 낙태를 범죄화함으로써 여성의 몸에 대한 부당한 공권력 개입이 가져오는 결과는 매우 참담한 것이었다. 이해 당사자가 아닌 자들에게야 낙태는 고고한 윤리적 문제일 수 있겠지만, 여성에게는 신체, 노동, 삶 전체를 둘러싸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낙태 범죄화가 곧 여성들의 삶의 문제로 자리잡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다.

낙태한 여성은 살인자인가?

을 초 낙태반대운동을 하는 프로라이프의사회는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낙태시술을 하는 병원 3 곳을 고발하였다. 검찰은 그 중 병원 한 곳의 사무장을 살인예비죄⁶⁾로 기소하더니 법원은 지난 8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2년6월의 징역. 2008년 양형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의 74%가 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가중처벌하는 13세미만 대상 강간죄의 경우도 63.6%가 3년형에 지나지 않는데, 과연 후기낙태 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두고 살인으로 다루며 2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맞는지 나에게서는 의문이다. 그러나 어떤 이는 강간죄와 살인예비죄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천인공노할 노릇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 같다. 성폭력범죄가 5대 강력범죄라 하더라도 ‘살인’과 그 죄질을 다룰 수는 없을테니 말이다.

후기낙태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떠나서, 7~8개월이라는 뒤늦은 시간에 낙태시술을 받는 것은 산모의 몸에도 상당한 무리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결코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니다. 낙태시술은 빨리할수록 산모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르게 결정하고 시술받을 수 있어야 한다. 뒤늦은 시간에서야 낙태시술을 받은 사람들 중 많은 경우는 청소년이고, 이들의 뒤늦은 낙태시술 사정 또한 다양하다. 임신사실을 매우 늦게 알게 된 경우, 알고 나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몰라 망설이면서 시간을 지체한 경우, 낙태시술을 받고 싶었지만 비용을 마련할 수 없었던 경우 등.

이 사건에서 사무장의 행동이 살인예비죄에 해당한다면 산모는 살인공범자이거나 청부살인자쯤 될 것이다. 적절한 정보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4) 문현아(2010), '낙태, 범죄로의 재구성', NGA 홈페이지, 미간행

http://www.glocalactivism.org/nga/view.html?action=view&wid=385&boardcode=think&mode=view&page=&list_mode=&search_field=&search_text=&order_by=&desc=&search_category=

5) 최희경(2005), 미국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본 낙태와 여성의 프라이버시 권리, 『낙태에서 재생산권으로』, 안현아 편

6) 살인예비죄란 살인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행위로서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범죄다. 본 사건에서는 사무장이 후기낙태 도중 살아있던 태아를 처리하라는 지시와, 그 지시에 따르지 않은 간호사 사이에서 태아가 살아남거나, 아니면 몇 분 혹은 몇 시간 이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살인예비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산모에게 우리의 정의에 찬 법은 ‘후기 낙태’는 ‘살인’이라고 단죄하며 그녀를 ‘살인자’로 몰고 있다. 산모가 법정에 섰다면 우리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서, 사회·경제적 자원이 부족해서, 성관계에서 주체적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해서, 성관계 이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몰라서, 임신사실을 알고서 어떻게 해야할지 충분히 고려하고 선택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우리사회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성관계를 어떻게 할지, 피임을 할지 안할지, 자신의 몸의 변화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 모든 것들은 지극히 사적인 문제이므로 사회는 아무 책임이 없는가? 그런 정보는 청소년들이 알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냐고 걱정하고 금지하기에만 바빴던 학교, 부모, 사회, 정부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할까? 이도 저도 알려주지 않다가, 원하지 않는 임신에 이르러서 느닷없이 ‘살인자’ 취급하는 건 대체 누구의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정당한 일일까?

정부주도의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는 사회에서는 유전적 이상을 가진 태아의 임신을 지속하려 하는 산모의 결정을 ‘생명권’을 존중한 결정이라고 보지 않고,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결정이라거나 사회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간주한다⁷⁾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반면 우리 사회처럼 복지적 책임감이 없는 정부에서는 소리높여 생명경시 풍조를 극복하여 낙태를 예방해야 한다고 외치면서,

낙태를 줄이기 위해 저렴한 가격의 피임방법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교육과 의료서비스의 접근도를 높이기 위한 과감한 투자를 정책적으로 실행했던 서구 유럽의 선례를 적극적으로 취할 계획은 없는 듯하다. 낙태결정을 생명보호와 대치되는 행동으로 대립시키면서 산모를 범죄자로 내모는 정부가 기껏 한 일은 저출산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영구피임시술을 건강보험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다⁸⁾.

낙태결정, 책임있는 선택

여성주의자들은 홀로 온전하게 존재하는 인간을 상정하고 있는 근대 자유주의 철학의 추상적 자아 개념은, 인간존재의 사회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오류를 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인간존재의 상호의존성, 관계성, 연대성 등에 주목한 이론가들은 추상적이고 허구적인 자아 개념이 어떻게 현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인간의 관계성에 기반한 판단과 가치를 평가절하하는지 치밀하게 논증하였다.

임신한 여성의 독특한 존재조건에 대한 몰이해도 근대 자유주의적 자아 개념에서 비롯한다. 어느 누구의 지원이나 지지없이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남성상을 기준으로 상정하는 권리 담론은, 임신한 여성과 같은 다중적 존재⁹⁾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지 못하다. 산모와 배아/태아는 추상적인 근대적 자아 개념에서 상정하는 독립된 권리 담지자로서 서로 분

7) 하정옥(2010), ‘임신한 여성의 결정과 자율성’, 『페미니즘연구』제10권 1호, (사)한국여성연구소, 25p.

8) 1. 영구피임 목적으로 본인이 원하여 피임시술을 시술받는 경우에는 2004년12월1일부터 비급여대상(진찰료, 처치료, 약제비 등)으로 적용되어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되, 인공임신중절술이 허용되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임신으로 모성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토록 하였습니다.

2. 자녀양육으로 인한 실질적 어려움 등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2자녀 이상이 있는 경우 등 건강보험 적용토록 해달라는 건의는 현행 제도상 수용하기 어려움을 알렸드리며, 과거 가족계획사업으로 피임시술은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진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였으나, 저출산현상이 지속되어 출산장려정책의 필요성을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영구피임시술(정관 및 난관결찰술)에 대한 건강보험지원을 유지하기 곤란하다 하여 피임약 복용과 마찬가지로 영구피임시술을 받는 경우도 급여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의 답변에서 인용)

9) 하정옥(2010): 13p.

리되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서로의 권리가 대립되는 갈등관계인 양 상정하는 이분법적 권리구도는 너무 일천하고 단편적이며, 늘 여러 존재를 동시에 고려하고 결정하는 임신한 여성의 삶과는 완전히 유리된 개념틀일 뿐이다.

어떤 이는 일천한 이분법적 구도에 따라, 낙태하는 여성을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여성, 문란하고 쾌락만 즐기는 여성 등으로 몰아세우며 상대방(배아/태아)의 권리를 처참하게 짓밟는 무자비한 인간 취급을 하는데 아마도 임신한 여성을 단 한 명도 만나 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닐까 싶다. 계획하지 않은 임신은 누구에게나 충격이고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큰 과제다.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았는데 갑작스레 자신의 몸 안 어느 곳에서 장차 사람이 될 수도 있는 배아/태아가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빠른 판단과 결정을 요구한다. 지금 이 배아/태아를 10달간 정성껏 키워서 출산하고 그 이후에 육아에 필요한 자원과 노동을 기꺼이 투자할 것인지, 출산을 위해서 산모의 삶의 계획을 조절하고 자원은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산모와 산모를 둘러싼 사람들(가족 등)은 이 배아/태아와 어떤 관계에 있으며 어떤 지원과 협조가 가능한지, 배아/태아를 키워 출산함으로써 다른 존재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임신 6개월의 청소년녀가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 부모에게는 비밀로 해달라는 청소년녀를 설득해 엄마와 함께 원스탑 지원센터인 경찰병원으로 연계, 그러나 병원에서는 강간임을 입증하려면 재판에서 가해자임이 판명되거나 최소한 고소된 사건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며 시술을 거부,

고소할 의사가 없었던 청소년녀는 결국 어렵게 동네 병원을 수소문해 이 사건을 고소하지 않을 것, 진단서를 요구하지 않을 것, 이후 병원에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을 것 등을 약속하고 자비로 인공유산을 함. (2007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 사례)¹⁰⁾

목사님이 신도가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상담을 청해 오셨다.

신도의 나이는 26세로 주부인데 아이가 현재 3명이고 임신 10주된 임신부인데 며칠전 남편이 급작스런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었다는 것. 당장 생활을 해결 할 수도 없고 먹고 살 길도 막막한데 임신 10주된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 중이라는 것. 신도의 상황은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낙태를 하고 싶어하는데 주변 어디에서도 낙태를 할 수 있는 곳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 신앙적인 입장에서 아이를 지우면 안된다고 얘기해야 하지만 그 신도의 상황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현실이 있어 목사님도 무척이나 고민이 된다는 것이었다.

이런 경우에 아이 3명과 함께 먹고 살길을 걱정해야 하는 주부의 입장에서 임신 10주된 아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주부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프로라이프의사회에 물어보고 싶다, 당신이 이런 상황이라면? ¹¹⁾,

위의 사례에서 어느 산모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어느 산모가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인가? 어느 산모의 결정이 생명권을 짓밟는 무자비하고 이기적인 선택이며, 어느 산모의 결정이 생명권을 온전히 존중하는 선택인가? 또 하나. 어느 산모의 결정이 온전히 산모 개인에 의해서만, 혹은 개인을 위해서만 이루어졌는가?

임신한 여성은 배아/태아의 건강을 위해 자신의 치료행위를 유보하기도 하고, 반대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선택하기도 한다. 산모는 태아와 자기 자신의

10) 이미경(2007), '성폭력피해 생존자의 인공유산 선택권', 나눔터 58호, 한국성폭력상담소

11) 신연숙(2010), 출처: 한국여성의전화 <낙태에 대한 이야기> 웹사이트 <http://www.hotline.or.kr/>

관계, 가족 등 타인과 태아의 관계를 고려하여 출산과 낙태, 출산 이후의 양육 환경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 어떤 결정도 산모만을 위한 혹은 태아만을 위한 결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임신한 여성의 존재조건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리고 산모의 임신 유지 결정만으로 존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태아를 위해 산모는 누구보다도 책임감 있게 심사숙고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의무를 지닌다¹²⁾. 이 의무를 가장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조건은 마땅히 숙고 끝에 내릴 결정을 책임감있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권한을 산모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온전한 조건하에서만 책임있는 산모의 결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시대가 아니어도 이렇게 낙태를 범죄화 할 것인가?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낙태를 통제함으로써 결국 여성의 몸을 도구화한다는 문제제기를 피하기 위해 애써 저출산과 낙태를 분리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의혹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이는 처음부터 보건복지부의 불투명한 태도가 만들어낸 의혹 때문이기도 하거니와¹³⁾, 인구가 많을 때는 무분별한 피임과 낙태시술을 강요했다가, 인구가 줄어드니 슬그머니 영구 피임시술을 의료보험 혜택에서 제외시키고 반면 영구피임시술을 받은 자를 위한 복원시술을 보험대상에 포함시키는 등¹⁴⁾ 일련의 정책변화에서 출산은 인구정책의 관점

에서 통제/관리의 대상일 뿐이라는 철학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낙태를 범죄화하면 가장 큰 피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단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임신부다. 불법의 명예를 쓴 낙태시술의 비용은 높아지게 되고,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음성화된 불법시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산모의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도 마련하지 않으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출산을 강요하는 사회는 낙태가 생명권도 결정권도 아닌, 단지 출산능력을 가진 여성의 몸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이슈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입증할 수 없는 임신 동기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려 들고¹⁵⁾, 낙태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함부로 재단하며(누가 감히 출산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상황을 ‘공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 인구가 많은 때는 낙태를 눈감고 권장하다가, 인구가 줄어들면 피임시술도 건강보험에서 당당히 제외시키는 나라. 매달 적지 않은 돈을 보험에 납입하면서도 피임시술에 드는 비용은 사비로 알아서 해결해야 하고, 그러다가 원하지 않는 임신이라도 되면 법망을 피해 불법행위라는 온갖 부담을 지고 고비용과 고위험의 환경에서 애걸복걸 매달려서 시술을 받아야 하는 사회. 강간피해로 임신되어도 생명을 잉태했으니 낳아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는 뻔뻔한 인간들이 당당한 사회.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뇌하는 산모와 주변인들이 있다. 이

12) Janet F. Smith, 「권리의 갈등, 임신과 인공유산」, 『지배로부터의 자유』, 한국여성개발원, (1987)

13) 2009년 2월, 당시 보건복지부 전제희 장관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낙태율을 반으로 줄여도 출산을 증가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ld=003&aid=0002543267>

14) ○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그 일환으로 2004년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장관고시에 의거 영구피임시술을 받은 사람이 자녀를 더 갖고자하여 정관 및 난관 복원수술을 원할 경우에는 자녀수 등과 관계없이 건강보험의 급여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를 위해 임신시 등 수술료 외에 입원료, 검사료, 투약료 등을 합한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20%에 해당하는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 다만, 상급병실차액(1인용 병실등), 선택진료료(특진료) 등의 비급여대상은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의 답변에서 인용)

15)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강간피해로 인한 임신인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정부는 강간에 의한 임신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임신동기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결론에 직면하고 있을 뿐이다.

들에게 생명경시나 이기적 여성이라는 말 따위로 행사하는 폭력부터 당장 멈추어야 한다.

I. 정부

- 2009. 02. 25 전재희 장관, “낙태율을 반으로만 줄여도 출산율 증가에 큰 도움이 된다”
- 2009. 11. 25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제 1차 저출산 대응 전략 회의’
- 이명박 대통령, 낙태 문제 언급. 전재희 복지부 장관, 낙태 단속 강화 입장 표명.
- 2010. 02. 19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사회협약체 간담회 (보건복지가족부) 개최
- 2010. 03. 02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대책 발표
- 2010. 06. 04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사회협약체 발족

II. 프로라이프 의사회(c.f 진오비)

- 2009. 10. 18 진오비 “불법 낙태 근절 대국민 성명서” 발표
- 2009. 11. 01 낙태 근절 운동 선포식_“태아는 현재의 희망, 미래의 주인입니다”
- 2009. 12. 25 낙태 근절 운동본부를 프로라이프 의사회로 개칭
- 2010. 01. 01 프로라이프 의사회, 제보센터 활동 개시
- 2010. 02. 03 프로라이프 의사회, 낙태 시술 병원 3곳 고발
- 2010. 02. 16 프로라이프의사회, 낙태 근절을 위한 5대 우선 정책 과제 발표
- 2010. 03. 24 프로라이프 의사회 및 종교계, 2010 태아 살리기 범국민 대회’ 개최
‘낙태 근절을 위한 5대 우선 정책 과제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선포

III. 국회

- 2009. 10. 12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운석 의원, 불법낙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 (연간 50만건 이상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되나, 형법상 낙태죄로 기소되는 인원은 10명도 안 된다며 산부인과 의사들을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처벌함으로써 불법낙태를 줄이기 위한 노력 해야 한다-국민일보 2009.10.14)
- 2009. 12. 03 국회 홍일표 의원 주최 토론회 “낙태, 불편한 진실 이대로 둘 것인가”
- 2010. 03. 17 국회 전현희 의원실 주최 토론회 “낙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 2010. 03. 29 국회 원희목 의원실 주최 토론회 “낙태문제 해결을 위한 대토론회”
- 2010. 04. 13 홍일표 의원 모자보건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IV. 여성계

- 2009. 11. 26 “여성의 재생산권 부정하는 낙태 방지 정책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 발표
- 2010. 02. 03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낙태고발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라!” 의견서 발표
- 2010. 03. 05 3. 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의 임신 · 출산 및 몸에 대한 결정권 선언” 기자회견
- 2010. 06. 07 인공임신중절예방 사회협약체 발족취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 성명서 발표
- 2010. 06. 22 “임신중절 돕겠다”며 저지른 성범죄, ‘낙태 범죄화’에도 책임 있다! 성명서 발표
- 2010. 08. 31 임신중지(낙태)권 요구안: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지 말라’ 발표 기자회견

공직사회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 현황 및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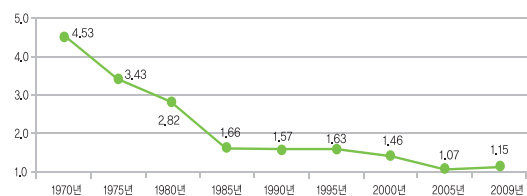
정 만 석 |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장

1. 논의 배경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를 지나 초저출산 국가로 향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¹⁾은 1970년 4.53명에서 1980년 2.82명, 1990년 1.57명, 2000년 1.46명으로 급속히 낮아지고 있으며, 2009년 현재는 1.15명 수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71명과 비교해 6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게 된 이유로 1970년대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해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깊숙이 자리 잡은 것을 이유로 들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 원인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쉽지 않은 사회·직장적 요인, 미래의 소득 불안정 요인과 과중한 육아·교육비용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최숙희 외, 2006; 조복희, 2009)^{2,3)}라는 분석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림 1〉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추이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

저출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당면한 문제임에도 우리의 경우에는 그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고 파급영향도 선진국보다 압축적이고 크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1)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 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며, 출산력 수준 비교를 위해 활용되는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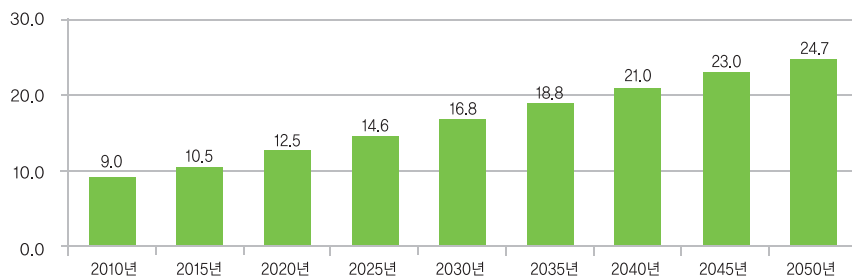
2) 최숙희 외(2006),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 방안”,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2006년 9월

3) 조복희(2009),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과 요인”, 「한국유아교육학회 소식」 제46권

또한 우리나라는 저출산 뿐만 아니라 고령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2018년 전체 국민 중 노인 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가 도래하고,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09년 조세연구원 보고

서에 따르면 저출산이 진행될수록 청년인구가 감소하여 전체 인구의 고령화를 초래함으로써, 장래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국가의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연금과 의료 등의 복지비 지출을 가중시켜 국가재정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 될 전망이라고 한다.

〈그림 2〉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 전망



※ 자료: 한국조세연구원('09), 기획재정부(연금·건강보험·기초생보 등 10개 분야별 인구·GDP·정책변수 등을 감안하여 전망)

2000년대 이후 국내 저출산 원인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선진국의 사례 소개, 국내 기업에 대한 사례분석, 인식조사, 이론적 고찰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의 현황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연구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공직사회에서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과 앞으로의 추진과제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자 추이를 통해서 본 공직내 변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07년 1.25명에서

2008년 1.19명, 그리고 2009년 1.15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휴가자가 2005년 5,102명에서 2009년 7,782명으로 52.5% 증가하고, 육아휴직 인원이 2005년 1,960명에서 2009년 7,023명으로 지난 5년간 3.6배 증가하였다는 것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함께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 되고 있음을 뜻한다.

즉,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해온 다양한 정책들이 적어도 공직사회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1) 출산휴가 현황

출산휴가 인원은 2005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출산휴가 이용자는 2005년 5,102명에서 2006년 5,843명, 2007년 6,508명, 2008년

:: 이슈브리프

7,542명, 2009년 7,782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52.5% 증가(5,102명 → 7,782명)하

였다. 출산휴가자의 증가는 저출산 극복의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이용자 수

* ()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출산휴가 이용자 수	5,102 (2,699)	5,843 (2,835)	6,508 (3,398)	7,542 (4,045)	7,782 (4,483)
전년대비 증감률(%)	-	14.5	11.4	15.9	3.2

※ 대상 :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행정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출산휴가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여성공무원의 지속적인 증가가 주요 요인이며, 여성의 채용인원 증가에 따라 전체공무원 중 여성공무원 비율은 2005년 38.1%(348,710명)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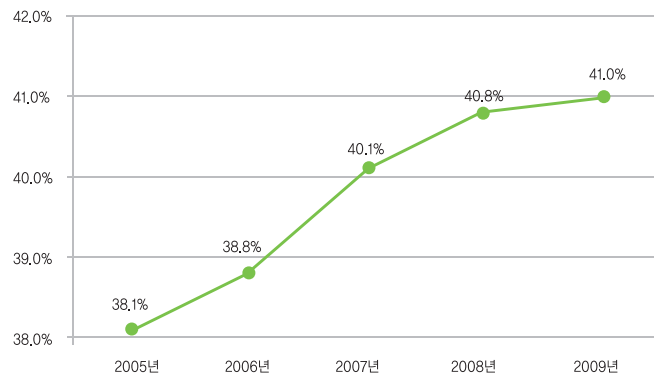
2009년 41.0%(400,570명)로 2.9%p(51,860명) 증가하였고, 이는 가임여성의 증가와 함께 출산자녀수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여성공무원 현황

* ()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체공무원		915,221	940,397	963,132	968,836	978,087
여 성	인원	348,710	365,178	385,759	395,464	400,570
	비율(%)	38.1	38.8	40.1	40.8	41.0

〈그림 3〉 여성공무원 비율 증가추세



2) 육아휴직 현황

가) 전체공무원

만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허용되는 육아휴직은 2005년 1,960명에서 2009년 7,023명으로 지난 5년간 3.6배 증가하였다. 특정직을 제외

한 행정부 국가·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은 2005년 1,960명, 2006년 2,996명, 2007년 3,612명, 2008년 5,730명, 2009년 7,023명으로 연평균 3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육아휴직 현황(단위:명,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육아휴직 인원	1,960	2,996	3,612	5,730	7,023
전년대비 증감률(%)	-	52.9	20.6	58.6	22.6

나)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은 여성만이 가야한다는 즉, 육아는 여성만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점차 약화되면서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도 매년 증가하여 지난 5년 동안 2.8배 증가(2005년 135명 → 2009년 386명)하였다.

다만 전체 육아휴직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05년 6.9%에서 '09년 5.5%로 지난 5년간 1.4%p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된 이용자인 여성의 육아휴직 증가폭이 남성보다 더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4〉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현황(단위:명,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1,960	2,996	3,612	5,730	7,023
여성	1,825	2,801	3,425	5,385	6,637
남성	135	195	187	345	386
남성비율(%)	6.9	6.5	5.2	6.0	5.5

다)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된 2004. 3월 이후 이들 공무원의 육아휴직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5년에는 4명에 불과했던 육아휴직 인원이 2006년에는 22명, 2007년 31명, 2008년 31명, 2009년 37명으로 지난 5년간 약 9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가임기 계약직공무원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만 허용하던 것을 '6개월'로 단축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계약직의 육아휴직이용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3.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

1) 지금까지의 노력

현재 우리나라에 초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주요 원인은 무엇보다도 직장에서의 역할과 자녀양육과 같은 가정에서의 역할 즉,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동시에 적절하게 수행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여성부, 2006)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 요건을 만3세 이하 자녀에서 2008년 만6세로 확대하여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또한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경우 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다.

또한, 육아휴직수당은 1년 동안 매월 20만원씩 지급하였으나,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매월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최초 1년간의 육아휴직 기간을 재직경력에 100% 인정하도록 하여 승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한편, 육아휴직요건⁵⁾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제한하지 않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였고,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휴가·휴직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공백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2) 앞으로 추진될 정책들

정부는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만 국한되었던 출산과 보육의 문제를 국가적 중대과제로 인식하여, 기

존의 특정부처에서 추진하던 일회적이고 한시적이던 정책들을 범정부적인 노력으로 통합시키고, 민간 부문에까지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첫째, 보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50%에서 70%까지 확대하며, 취업모에 대해서는 국공립보육시설 우선 입소권을 부여하며,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둘째,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시간제근무제를 비롯한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업무공백은 대체인력뱅크를 통해 우수 인력을 즉각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련제도를 개정하여 육아휴직요건을 종전 ‘만6세 이하 자녀’에서 ‘만8세 이하 자녀’로 확대하며,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도 종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 현재 2,300여 시간에 이르는 근로시간을 ‘20년까지 1,800시간대로 단축할 예정이며, 직장 보육시설 미설치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주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셋째,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11년 이후 출생한 둘째자녀 이상에 대해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주택용자시 금리우대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넷째, 결혼과 임신·출산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소득요건을 종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완화하였으며, 유자녀 기혼병사에 대해서는 현역병이 아니라 상근예비역 편입대상자

4) 여성부(2006), “가족친화 기업모델 및 사례연구”, 여성부 2006년 연구보고서

5) 육아휴직 요건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이다.

에 편입되도록 하였다.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등 저출산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국가들의 경우에서도 특정 정책의 효과 때문이 아니라,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과 이를 위한 유연근무제 등의 조직문화 개선, 출산과 보육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과감하고도 폭넓은 재정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시행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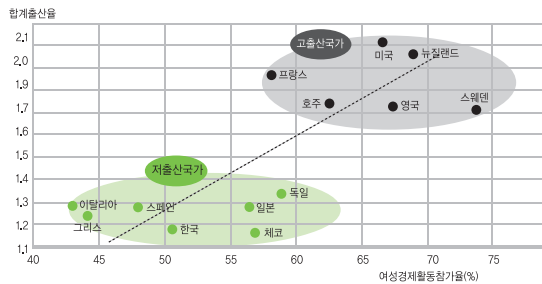
4. 앞으로의 과제

공직부문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두고 흑자는 최근의 취업난 등과 결부

시켜 공직이라는 ‘괜찮은 일자리’에 국한된 ‘특별한 현상’으로 간주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부처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으로 실현시킨 결과가 구체화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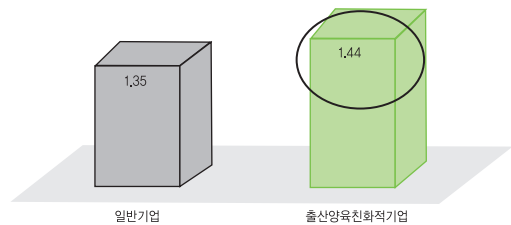
OECD 국가 중에서 여성 취업률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고, 우리나라에서도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기업일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통계는 출산과 양육을 전체 사회구성원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함께, 관리자가 출산·양육에 대해 친화적인 리더십을 보여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그림 4〉 OECD 주요국의 경제활동과 출산율의 관계



※ 자료 : OECD(2005), Factbook / 보건복지부(2006), 「출산·가족친화 기업경영 확산방안 연구」

저출산 문제는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 우리나라에 게 닥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직접적인 위협요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자녀양육 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기반 확대」, 「육아, 보육



시설 등 사회적 인프라구축」 등 다양한 정책 추진과 함께 출산과 양육에 걸림돌이 되는 법과 제도들을 찾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아동성폭력 현황 및 피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방안

윤 덕 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I. 들어가며

최근 발생한 일련의 아동성폭력사건들은 경악과 분노와 함께 자녀의 안전에 대하여 크게 걱정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에 대한 입법, 사법, 행정부의 다각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아동성폭력 사건들에 대해 더 이상 낮놓고 있을 수만은 없으며, 우리 사회가 성폭력범죄에 대한 물샐 틈 없는 감시망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서는 안 될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아동성폭력사건은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아동 중에서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건은 2004년 721건, 2005년 738건, 2006년 980건, 2007년 1,081건, 2008년 1,220건으로 나타나 해마다 10%씩 증가하고 있다.¹⁾ 하지만 법원에서는 아동성폭력범죄자에게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많아 매우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성폭력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동에게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이 전 생애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며, 가족들의 고통이 심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아동성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또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아동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고에서는 아동성폭력사건의 현황과 문제점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방안에 대해 차례대로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1) 내일신문 2009. 10. 7

II. 아동성폭력 피해현황

다음은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을 통해서 아동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연령을 보여 주고 있다.

2006, 2007, 2008년을 보면 6세 이하 1.3%, 1.2%, 1.0%, 7세-12세 이하 5.8%, 6.6%, 7.0%, 13세-15세 이하 5.6%, 5.1%, 5.3%, 16-20세 이하

17.4%, 18.2%, 19.0%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우선 성폭력범죄 발생을 자체가 증가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아동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으로써 신고가 늘어난 때문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표 1〉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연령(1997-2008)

(단위: 건(%))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6세 이하	2.4	2.6	2.3	2.0	1.5	1.6	2.0	1.2	1.7	170 (1.3)	159 (1.2)	153 (1.0)
12세 이하	5.7	6.7	5.7	6.6	5.2	7.5	6.6	5.0	5.0	762 (5.8)	883 (6.6)	1,029 (7.0)
15세 이하	10.8	9.0	8.3	8.5	4.6	2.7	4.3	3.0	4.6	733 (5.6)	690 (5.1)	776 (5.3)
20세 이하	24.6	25.3	26.6	23.1	19.9	14.5	16.2	13.3	19.4	2,280 (17.4)	2,435 (18.2)	2,799 (19.0)
30세 이하	26.4	25.9	27.3	27.8	34.9	33.9	37.0	43.2	38.1	5,023 (38.3)	5,149 (38.4)	5,377 (36.5)
40세 이하	22.0	19.2	16.9	18.7	19.9	18.1	18.9	17.6	14.2	1,759 (13.4)	1,762 (13.1)	1,908 (13.0)
50세 이하	8.5	8.2	8.8	9.7	9.3	10.4	11.1	11.5	11.2	1,535 (11.7)	1,579 (11.8)	1,751 (11.9)
60세 이하	2.1	2.2	2.6	2.2	2.7	2.5	2.6	2.9	2.7	420 (3.2)	485 (3.6)	609 (4.1)
60세 초과	1.2	1.0	1.5	1.4	1.5	1.8	1.4	1.6	2.0	228 (1.7)	273 (2.0)	327 (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3,573 (100.0)	13,482 (100.0)	14,919 (100.0)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8-2009 재구성.

*계의 건수는 6세 이하~60세 초과의 사건 소계에 불상 건수를 합한 수임.

다음은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피해자관계를 보여 준다. 친족, 친구, 지인, 직장 등 소위 아는 사람인 경우가 2006, 2007, 2008년의 경우 18.6%, 15.3%,

17.5%이고, 타인은 52.9%, 54.4%, 51.5%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우선은 공식적으로 형사사법기관에 보고된 성폭력범죄는 아는 사람에 의한 경우

이슈브리프

보다는 모르는 사람에 의한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추세를 보면, 아는 사람의 범죄비율이 증가추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는 모르는 사람에 의한 범죄일 것이라는 통념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표 2〉 성폭력범죄의 가해자-피해자 관계(1997-2008)

(단위: 건(%))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친족	1.2	1.1	2.0	2.0	2.1	2.5	2.1	2.1	2.1	211 (2.0)	137 (1.4)	286 (2.1)
친구	2.0	2.7	2.7	2.7	2.7	2.7	3.0	3.7	3.9	187 (1.8)	132 (1.4)	210 (1.6)
지인	16.5	17.6	16.3	15.7	14.8	14.6	12.9	10.2	9.5	1,201 (11.6)	950 (9.9)	1,477 (11.0)
직장	3.7	3.5	3.5	3.7	3.5	3.8	3.6	3.3	3.4	329 (3.2)	255 (2.6)	375 (2.8)
타인	51.6	48.4	52.2	53.1	55.9	55.5	56.6	54.5	53.9	5,475 (52.9)	5,242 (54.4)	6,885 (51.5)
기타	16.1	17.2	14.4	13.8	13.5	12.1	13.7	9.4	7.8	708 (6.8)	554 (5.8)	846 (6.3)
미상	9.0	9.6	9.0	9.0	7.7	8.8	8.1	16.9	19.4	2,242 (21.7)	2,362 (24.5)	3,298 (24.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353 (100.0)	9,632 (100.0)	13,377 (100.0)

※ 자료 : 1997-2005년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외(2008), 「2007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06-2008년은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7-2009, 재구성(지인 범주에 애인, 이웃을, 기타 범주에 국가, 공무원, 거래상대방을 포함시킴).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를 보면 더욱 확실해진다. 2009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를 보면, 아는 사람이 1,137건(85.0%)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모르는 사람 143건(10.7%), 미상 58건(4.3%)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아는 사람인 경우, 직장내가 328건(24.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친족, 친/인척 201건(15.1%), 초중고 및 대학 110건(8.2%), 친밀한 관계 101건(7.6%), 주변인의 지인 97건(7.3%)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친족관계인 경우도 꾸준히 15%

가까운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친족, 친/인척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가 아동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아동성폭력 문제라고 하면 흔히 신문지상에 사건화되는 것처럼 모르는 사람에 의한 흉악한 범죄를 연상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아동성폭력에 관련된 스테레오 타입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에 의한 사건 만큼이나 아는 사람에 의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성폭력사건, 특히 아동성폭력사

건의 특징이다.

따라서 아동성폭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 의한 사건에 대한 대처방

안을 다르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며, 한 쪽면만 보고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표 3〉 피해자/가해자 관계(상당통계)

연도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소계	모르는 사람	미상	총계
	친족, 친/인척		직장	친밀한 관계	채팅/ 소개로 만난 사람	동네 사람	서비스 제공자	성직자 /신도	초중고 /대학	유치원 /학원	주변인 의 지인	기타				
	친족	친/인척														
2009	104 (7.8)	97 (7.3)	328 (24.5)	101 (7.6)	62 (4.6)	67 (5.0)	58 (4.3)	·	110 (8.2)	39 (2.9)	97 (7.3)	74 (5.5)	1,137 (85.0)	143 (10.7)	58 (4.3)	1,338 (100.0)
2008	108 (7.6)	96 (6.7)	358 (25.0)	128 (9.0)	61 (4.3)	54 (3.8)	51 (3.6)	·	118 (8.3)	53 (3.7)	73 (5.1)	109 (7.6)	1,209 (84.5)	156 (10.9)	65 (4.5)	1,430 (100)
2007	149 (7.6)	124 (6.4)	490 (25.2)	174 (8.9)	69 (3.5)	92 (4.7)	74 (3.8)	·	149 (7.6)	61 (3.1)	118 (6.1)	165 (8.5)	1,665 (85.5)	242 (12.4)	41 (2.1)	1,94 (100)
2006	313 (13.5)	47 (2.0)	527 (22.7)	182 (7.9)	80 (3.5)	120 (5.2)	101 (4.4)	23 (1.0)	235 (10.1)	·	119 (5.1)	188 (8.1)	1,935 (83.5)	306 (13.2)	76 (3.3)	2,317 (100)
2005	219 (10.2)	27 (1.2)	562 (26.1)	181 (8.4)	103 (4.8)	102 (4.8)	106 (4.9)	12 (0.6)	202 (9.4)	·	106 (4.9)	171 (7.9)	1,791 (83.2)	313 (14.6)	47 (2.2)	2,151 (100)
2004	136 (5.8)	132 (5.6)	634 (26.8)	158 (6.7)	105 (4.45)	124 (5.2)	105 (4.45)	12 (0.5)	225 (9.5)	·	115 (4.9)	141 (6.0)	1,887 (79.9)	389 (16.5)	86 (3.6)	2,362 (100)
2003	166 (5.8)	150 (5.3)	669 (23.5)	162 (5.7)	137 (4.8)	175 (6.2)	107 (3.8)	13 (0.5)	342 (12)	·	·	317 (11.2)	2,238 (78.8)	497 (17.5)	104 (3.7)	2,839 (100)
2002	134 (4.5)	244 (8.3)	597 (20.2)	152 (5.1)	95 (3.2)	218 (7.3)	80 (2.7)	8 (0.3)	351 (11.9)	·	·	399 (13.5)	2,278 (77.0)	572 (19.3)	111 (3.7)	2,961 (100)
2001	127 (4.4)	228 (7.9)	634 (22.1)	277 (9.7)	·	261 (9.1)	102 (3.6)	20 (0.7)	284 (9.9)	·	·	291 (10.1)	2,224 (77.5)	530 (18.5)	115 (4.0)	2,869 (100)

※ 자료 :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III. 아동성폭력 사건화의 문제점

1. 낮은 신고율

2007년 '전국 성폭력실태조사'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자의 신고율은 가장 심각한 성폭력 피해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강간·강간미수의 경우 7.1%로 나타났다.²⁾ 이와 같이 신고율이 낮은 이유로는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가해자측의 무리한 합의 요구, 성폭력을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가족이나

²⁾ 성폭력유형에 따라 신고율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강간·강간미수(7.1%), 스토킹 피해자의 신고율(6.8%), 심한 추행(5.3%), 가벼운 추행(4.7%), 성기노출(4.3%), 음란전화(1.6%), 부부강간(1.1%)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가족부(2008), 『2007년 전국 성폭력실태조사』, p.280.

사회의 인식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법기관에 보고되는 비율은 일부이고, 대부분이 형사사법기관에 인지되지 않은 채 숨은 범죄로 남아 있게 된다.

또한 낮은 신고율의 원인 중 하나인 가족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신고가 어려워 지게 되는 것을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경험을 말했을 때 가족, 친구,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과도하게 걱정하거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축소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시선에 기인한다. 많은 연쇄 성폭력범죄자들이 “처음 가해를 했을 때 아무도 신고하지 않더라”라고 말하는 것은 성폭력을 피해자의 수치로 보는 사회적 시선을 범죄자가 죄책감 없이 가해를 하는데 이용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가해를 용인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³⁾ 또한 잘못된 사회인식으로 인해 성폭력피해자가 전염병 환자 취급을 받으면서 동네에서도 이사를 강요당하는 일이 일어나며, 학교에서는 전학시키려는 학교와 전학을 받지 않으려는 학교로 인해 피해아동들은 공중에 뜬 상태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⁴⁾

2. 중한 사건에 대한 처벌강화만이 전부가 아님

현재 성폭력범죄에 대한 정책들은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은 성폭력가해 범죄자에 대한 강경대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강력한 법과 제도가 적용되는 성폭력범죄가 전체 성폭력 범죄 중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대법원 발표자료에 의하면, 2008년 성폭력범죄의 경

우 실행 선고율이 39.5%, 집행유예 38.4%, 벌금형 6.7%, 선고유예 2.9%, 기타 12.5%로 실행선고율이 매우 낮은 편이며, 보건복지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2007년 기준 전체 아동성폭력 범죄 1,839건 가운데 무기징역은 0.4%에 불과하고, 벌금형 42.1%, 집행유예가 30.5%를 차지하고 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의 경우 집행유예 23.2%, 벌금형 18.8%로 처벌이 약한 편이다.⁵⁾

이와 같이 형사사법기관에 신고된 범죄, 그 중에서도 중한 사건에 대한 정책만으로는 전체 성폭력사건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전체 성폭력사건의 예방과 재범방지에 기여할 수 없게 된다. 신고되고 형사사건화된 사건은 전체 발생건수의 일부이고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사건화되지 않는 수면밑의 많은 사건의 발견과 대처 및 피해자보호가 필요하다.

3. 친족성폭력 문제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중 문제가 복합적이고 심각하면서도 발견이 쉽지 않고 따라서 보호·지원이 어려운 문제가 친족성폭력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친족성폭력을 비롯한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피해사실이 빠른 시일 내에 주변 어른들에게 인지되지 않으면 피해가 반복되며, 피해가 장기화될수록 피해유형도 점차 심각한 형태로 진전되어 진다. 이처럼 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동일 피해자가 반복해서 범죄피해를 당하는 비율이 아동대상의 성

3) 이임혜경(2010), 2010. 5. 11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아동성폭력 개선방안 간담회’ 토론자료.

4) 박희영(2008), “우리 사회, 여아의 안전을 진단한다 - 아동성폭력을 중심으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44차 여성정책포럼 자료집, pp.96-97.

5) 이임혜경(2010), 2010. 5. 11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아동성폭력 개선방안 간담회’ 토론자료.

범죄의 연쇄성 범죄 중 비율이 34.8%나 된다고 한다. 즉, 면식관계의 범죄는 신고되어 드러나기 전까지 아는 사람에 의해 반복적으로 저질러진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⁶⁾ 따라서 친족성폭력 사례개입과 피해자 치료를 위한 피해 사실 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많은 친족성폭력 사례가 조기인지를 불가능하게 하는 가족적 구조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가족과 주변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교나 지역사회차원에서 조기인지와 발견을 가능하게 하고 친족성폭력 고위험군을 찾아내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⁷⁾

IV.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방안

아동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당초 여성폭력방지협의체로 시작하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로 확대되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광역차원의 지역연대와 시·군·구 지역연대가 전국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지역연대에는 도청과 의회외에 검찰청, 경찰청, 교육청,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성매매현장상담센터, 보호시설, 1366, 아동·노인보호전문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병원, 법률구조공단 등 다양한 전문기관들이 구성요소로 참여하고 있고, 지역연대를 통해 사건화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성폭력 예방과 사건 발생 이후 발빠른 발견과 대처로 성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하고 사건발생 이후에도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연대 활동의 한 예로 경남 지역연대의 마을지킴이 활동을 들 수 있다. 마을지킴이로 선임된 사람들이 주변을 유심히 눈여겨 봄으로써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을 사전에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특히 친족성폭력이나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을 발견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으로 옮겨 주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급히 지나치면 발견할 수 없는 아동성폭력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의의가 있다. 다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동지킴이 집이다. 아동이 급한 범죄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현재는 자원봉사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범죄예방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행동력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장치는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범죄발생율이 높은 지역에 아동지킴이 집의 설치를 더욱 늘리고, 업주의 실질적인 권한과 그에 따른 의무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초등학생 대상의 안전지도 제작이 각광을 받고 있다. 자기가 사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위험한 곳, 불안한 곳을 지도에 표시하는 작업을 통해 통학로 주변의 위험공간 판별과 범죄대처요령에 대

6) 정연대(2009), “아동대상 성범죄의 가해자-피해자 관계에 따른 범죄행동 특성분석”, 『제3회 범죄행동분석 학술세미나 - 성범죄 프로파일링 -』, 2009. 11. 20, 경찰청, p.114.

7) 강은영(2010), “친족성폭력 피해아동 보호지원방안 - 가족지원, 학업지원, 친권제한-”,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망 확보』, 제4회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기념 심포지엄 자료, p.176.

:: 이슈브리프

한 체험적인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경찰의 집중 순찰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한 지역의 범죄환경 정보공유와 통합적 범죄안전지도를 구축할 수 있다. 안전지도 제작이 주는 잇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지역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관해 몇가지 실례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아동성폭력범죄는 사건발생 이후 범죄자를 체포하고 피해자를 치유하는데 드는 노력과 비용은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이다. 따라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기서 제시한 지역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동성폭력을 행한 범죄자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된다고 하는 처벌의 확실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고와 그에 따른 처벌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지면을 장식한 사건들에서 아동성폭력 범죄자들의 성폭력범죄의 재범상황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 재범상황이 높아진 것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막중한 것이다. 성폭력범죄자 역시 일찌기 청소년 시절부터 교육, 치료를 통해 범수가 높아진 어른으로 성장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철저하게 교육, 치료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참 · 고 · 문 · 헌

- 강은영·김한균(2009), 「친족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보호지원체계 점검」, 보건복지가족부.
- 경찰청(2009), 「제3회 범죄행동분석 학술세미나 - 성범죄 프로파일링 -」, 2009. 11. 20.
- 국가인권위원회(2010), 「아동성폭력 개선방안 간담회」 논의 및 토론회 자료, 2010. 5. 11.
- 법무부(2008), 「아동성폭력 재범방지 및 아동보호 대책」
- 여성가족부(2008), 「2007년 전국 성폭력실태조사」,
- 전국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2010), 「아동성폭력의 관련 법·제도 고찰」,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망 확보」, 제4회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기념 심포지엄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8), 「우리 사회, 여아의 안전을 진단한다 - 아동성폭력을 중심으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44차 여성정책포럼 자료집.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성가족부(2010),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성문화 개선 정책토론회」, 2010. 5. 26.

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사각지대¹⁾

김영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들어가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 만 40세 미만 전업주부들이 제외되어 이들의 건강검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는 건강검진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만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인 직장피부양자’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40세 미만의 전업주부가 세대주일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나,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일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고서 2007년도 자료에 따르면 여성 건강검진 수혜 대상자는 남성 건강검진 수혜 대상자보다 적고 수검률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낮다. 전체 수혜 대상자 중 남성은 55%(7,338,514명)이며 여성은 45%(5,961,327명)로 10% 차이로 여성 수혜 대상자는 남성보다 낮다. 수검률을 살펴보면 남성 대상 인원 중 수검률은 63%(4,619,850명)이며 여성은 56%(3,358,908명)로 7% 차이로 여성 건강검진 수검률은 남성보다 낮다. 이와 같은 성비 불균형은 건강검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전체 수검 인원 중 여성은 2003년에는 39.17% (2,174,412), 2004년에는 38.87% (2,666,399), 2005년에는 41.12% (2,642,909), 2006년에는 42.34% (3,580,993), 2007년에는 42.10% (3,358,908)이다(국

1) 본 원고는 김영택, 2009, ‘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사각지대 성인지적 분석 : 대상자 선정기준 타당성과 사각지대 소요예산 중심으로’에서 인용되었음.

민건강보험공단, 2007).

건강검진 대상자 및 수검자 성비 불균형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는 만 40세 기준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만 40세 미만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은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 직장에서 더 많이 일하며 가족의 대표자로서 세대주의 지위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데 직장가입자와 세대주는 건강검진의 수혜대상자로 나이 제한이 없는 반면에 피부양자와 세대원들은 나이가 만 40세 미만이면 건강검진 필요성이 있더라도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사회구조적인 원인이 건강검진의 수혜대상자 선정에서 여성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로서 만 40세 미만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중 건강검진이 필요할 수 있으나 건강검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 35세와 39세사이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는 것이다. 2008년 12월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직장피부양자 만 35세와 만 39세 사이의 여성은 783,821명인 데 반하여 남성은 155,869명이며 여성이 남성의 5배에 이른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중 만 35세와 만 39세 사이의 여성은 593,789명인데 반하여 남성은 215,078명이며 여성이 남성의 2.7배에 이른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이는 여성과 남성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참여를 보장받고 동등한 지위에서 동등한 권리와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성 평등(Gender Equality)한 사례에 위반된다.

진찰 및 상담, 체중 및 비만 정도와 혈압, 시각, 청력,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구강 검사 등이 최근 1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 항목들이다. 1차 검사 이후 질병발병 의심환자로 판정될 경우 2차 검사가 실시된다. 2008년 기준으로 2차 검사 항목에는 당뇨, 고혈압성 질환, 간장질환, 이상지질증질환, 신장질환, 흉부질환, 빈혈증 등이 있다. 고혈압, 당뇨병, 간질환 등 주요 만성퇴행성 질환(생활습관병)은 발병율이 증가 추세이고 사회적 문제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그러한 질환들을 일반건강검진 대상 질환에 포함시켜 예방 및 조기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일반건강검사의 선별 검사(screening test)는 질병의 증세는 보이지 않으나 질병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큰 대상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최근 목표 질환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의 1차 및 2차 일반건강검진 검사 항목이 변경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년도 건강검진 운영세칙 주요 변경 사항에 따르면 일반건강검진 목표질환 설정 및 검사항목 개선을 중심으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목표로 1·2차 검사항목을 통합·조정하였다. 구체적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크레아티닌을 1차 검진으로 실시하고, 두 번째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70세와 74세 인지기능저하(치매) 검사를 실시하고, 세 번째로, 1차검진 수검자에게 '건강위험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네 번째로 2차 검진은 보건학적 근거가 부족한 검사항목은 삭제하고 의사의 상담을 통한 고혈압·당뇨병을 집중 관리하기로 하였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운영세칙, 2009).

최근 전업주부들의 건강상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일반건강검진 검사 항목들은 전업주부들의 질병 예방 및 조기 치료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가정에서 다중 역할로 인한 전업 주부의 스트레스와 가사 노동 및 자녀 양육과 노인 돌봄의 부담으로 인하여 신체적 및 정신적인 고통 경험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30대 중반 및 후반 연령대인 전업 주부의 일반건강검진은 필수적이다. 특히 일반건강검진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40대 미만 저소득층의 전업주부일 경우 질병 발병의 징후가 있어도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여야 한다.

최근에 자궁경부암 발병을 연령대가 낮아짐으로 인하여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50%에 해당되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30대의 전업주부에게도 무료 자궁경부암 건강검진 혜택을 준 것과 마찬가지로 연령 조정을 통하여 40세 미만의 전업 주부에게 일반건강검진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 하다. 또한 일반건강검진 목표 질환이 심뇌혈관과 결핵으로 한정되었을 경우 고혈압, 비만, 결핵 검사의 연령은 20세에 시작하여야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이원철, 2006).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만 40세의 건강상태와 만 35세-39세 사이의 전업주부의 건강상태를 비교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를 활용하여 건강검진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만 40세에서의 건강상태와 만 40세미만, 특히 만 35세-39세 사이의 전업주부의 건강상태를 분석하여 만 40세 선정기준의 타당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근거 도출을 위한 데이터 분석 자료 제한성 및 건

강검진 자료의 질적 제한성으로 인하여 기존연구에서 만 40세 기준에 관한 타당성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30대의 전업주부들의 일반건강검진 인지도 및 요구도 등은 기존 조사에서 다루어지지 않아 실제 수요 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만 40세 기준의 보건학적 근거 타당성과 35세-39세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인 전업주부의 성인지적 예산 추계를 통하여 일반건강검진 혜택 방안 마련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또한 30대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 인지도 및 요구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일반건강검진대상자 선정기준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 만 40세 기준은 보건학적 근거가 부재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4기의 설문조사 및 건강검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전업주부의 건강 상태 및 건강검진율을 만 35세-39세 각 연령과 만 40세와 비교 분석하고 만 35세-39세와 만 40세-44세 구간의 전업주부 건강상태 및 건강검진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건강검진 대상자 중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의 만 40세 기준은 보건학적 근거로 설정되었다고 하나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근거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만 35세-39세 사이의 개별 연령별과 만 40세의 전업주부의 비교 분석에서 주관적 건강상태, 질환이환율(2 주간 몸이 불편했던 경험), 우울증인 경우 전반적으로 35세-39세의 전업주부가 만 40세 전업

주부보다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 만 35세-39세 사이의 전업주부가 몸이 아픈 경험이 늘어나고 산후 우울증과 더불어 가사와 자녀 양육, 돌봄 관련 스트레스는 각종 만성 질환 및 암으로의 전환 및 발전 단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질병 조기예방측면에서 만 35-39세 사이의 전업주부에게 무료 일반건강검진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

요통, 갑상선 장애 유병율의 경우에는 만 35-39세와 만 40세-44세 연령대의 전업주부간의 소폭의 차이가 존재하나, 만 35세-39세 사이에 이미 유병율이 나타나고 있어 만 35세-39세 사이 혹은 이전에 조기 진단을 통한 질병 예방을 필요로 한다. 또한 자궁경부암과 유방암의 경우 만 40-44에서 유병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만 35세-39세 사이에서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최근에는 실제로 30대에 자궁경부암 발병율이 나타나고 있어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 대상이 30대로 낮춰졌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건강검진에 의한 건강 상태에서도 주목해야 할 사실은 고혈압 전단계에 있는 만 35세-39세의 전업주부(14.8%)가 40세-44세의 전업주부(7.7%) 보다 거의 두 배나 높게 나타난다. 당뇨병과 관련된 공복혈당장애의 경우 두 그룹간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만 35-39세, 2.4% vs. 만 40세-44세, 2.4%) 이는 만성질환 예방적인 측면에서 건강검진, 건강교육, 건강상담이 만 35세-39세의 나이에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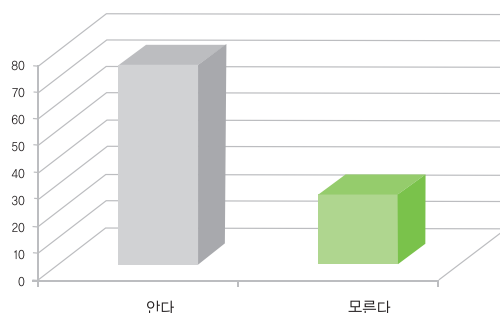
건강검진율을 살펴보면 만 35세-39세전업주부들이 만 40세-44세 보다 건강검진율이 낮다(26.7% vs. 57.4%). 또한 만 35세-39세 사이의 경우 일반

건강검진을 제외한 암 검진 혹은 사보험인 건강보험을 통한 건강진단율은 만 35세-39세전업주부들이 7.4% 인 반면 만 40세-44세의 전업주부들의 경우 일반건강검진을 포함한 암 검진 및 사보험인 건강보험 건강 진단율이 42.7%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건강 검진율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에 의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를 만 40세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정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다.

수요조사 결과 사각지대의 전업주부들 일반건강검진을 받기를 원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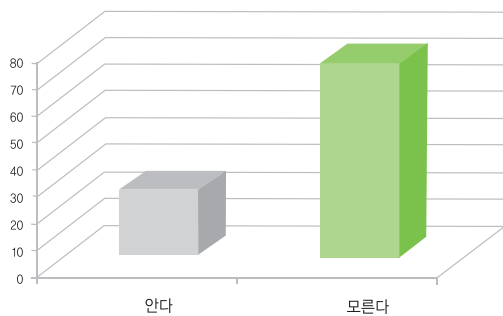
서울시내에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30-39세 전업주부 400명을 무작위로 선출하여 일반건강검진 관련 수요조사를 위하여 전화 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항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되는 일반건강검진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일반건강검진에 대하여 인지 유무를 묻는 질문에 조사대상자들 중 74.3%(297)가 안다고 답하였다(<그림 1>, 참조).

〈그림 1〉 건강검진 인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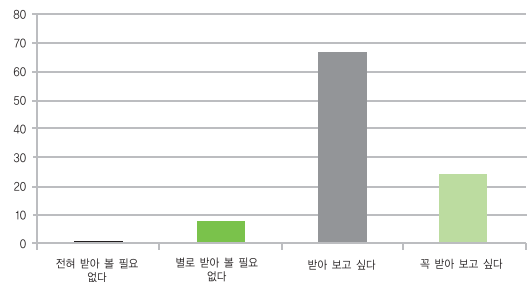
두 번째로, 만30세 이상 전업주부의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자궁경부암에 대한 암검진이 무료라는 사실에 관한 인지 유무를 묻는 질문에 25%(100)만이 안다고 답하였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건강검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고 일반건강검진 유무 정도만의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어진다(그림 2, 참조).

〈그림 2〉 자궁경부암 관련 건강검진 인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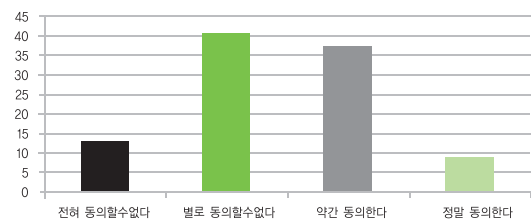
건강검진 요구도와 관련된 설문 문항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인 경우 만40세 이상만이 무료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로 제한이 되어 있는 데, 이런 무료 일반건강검진 수요에 대한 질문에 조사 대상자 중 66.8%(267)가 '받아보고 싶다' 로 대답한 전업주부가 제일 높은 분포를 나타내며 '꼭 받아보고 싶다' 라고 대답한 전업주부는 24.5%(98), '별로 받아 볼 필요없다' 라고 대답한 전업주부는 8.0%, '전혀 받아 볼 필요 없다' 라고 대답한 전업주부는 0.8%(3)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그림 3〉 일반건강검진 수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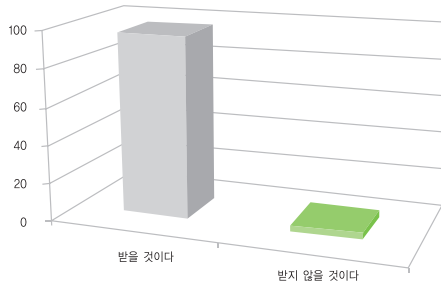
건강검진 요구도와 관련된 설문 문항 중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인 경우 만 40세 이상 기준에 관한 근거에 대한 동의 정도에 대한 질문에 조사 대상자 중 13.0%(52)가 '전혀 동의할 수 없다', 40.8%(163) '별로 동의할 수 없다', 37.5%(150)가 '약간 동의한다', 8.8%가 '정말 동의한다'에 답하고 있다(그림 4, 참조).

〈그림 4〉 건강검진 대상자 40세 이상 기준 동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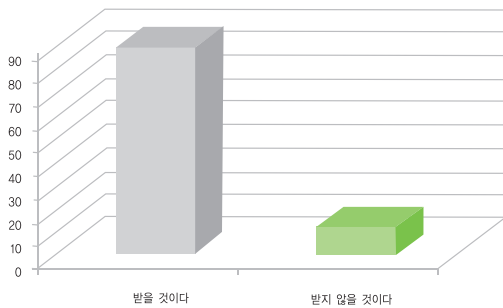
건강검진 요구도와 관련된 설문 문항 중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인 경우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만 40세 이상에서 40세 미만으로 확대할 경우 일반건강검진 수요 정도에 대하여 조사대상자 중 96.5%(386)가 '받을 것이다' 라고 답한 반면에 3.5%(14)가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하였다(〈그림 5〉, 참조).

〈그림 5〉 건강검진 대상자 40세 미만으로 확대 시 건강검진 수요 정도



건강검진 요구도와 관련된 설문 문항 중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인 경우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만40세 이상에서 40세 미만으로 확대 실시하나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건강검진 수요 정도에 대하여 조사 대상자 중 88.3%(353) '받을 것이다' 라고 답한 반면에 11.8%(47)가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하였다(〈그림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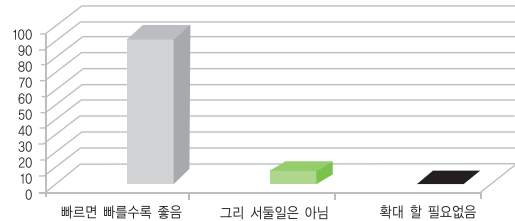
〈그림 6〉 최소한의 건강검진 비용 본인 부담 시 건강검진 수요 정도



건강검진 요구도와 관련된 설문 문항 중 40세 이상에 대한 일반건강검진 제도를 40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시기에 대한 의견은 조사대상자 중 92.3%(369)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6.5%(26)가 '그리 서둘일은 아니다', 1.3%(5)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에 응답하고 있다(그림 7, 참조).

〈그림 7〉 일반건강검진 40세 미만 확장 제도 시기 정도



나가며

이러한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 중 만 35세-만 39세 전업주부를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로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할 경우 소요예산을 측정하였다. 1차 일반건강검진 및 2차 건강검진 비용을 활용하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중 만 40세 미만인 여성 35세 이상 39세 이하의 연령의 대상인원을 파악하고 대상인원과 건강검진 1차 및 2차 수검률에 따른 예산 추계를 실시하였다. 실시 결과 최근 2007년 기준 1차 검진 여성 대상인원 수검율이 50%대이고 2차 검진 수검율이 30%대를 고려하여 가상시뮬레이션에서 가장 근접한 1차 검진 수검율 50%와 2차 검진 수검율 25%의 대상인원과 가상수검율을 적용하면 총 소요예산은 45,238,750,830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가진(보험료 납부액 하위 50% 대상) 만 35세-39세 전업주부를 위한 일반건강검진 사각지대 소요완화 예산 추계를 실시였다. 실시 결과 2007년 기준 1차 검진 여성 대상인원 수검율이 50%대이고 2차 검진 수검율이

30%대인 것을 고려하여 가상시뮬레이션에서 가장 근접한 1차 검진 수검율 50%와 2차 검진 수검율 25%의 대상인원과 가상수검율을 적용하면 총 소요 예산은 10,596,963,650 원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도별 암 검진을 제외한 일반건강검진의 예산 및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인원 및 수검율의 증가에 따라 2004년에 1,497억, 2005년 1,798억, 2006년 2,2224억, 2007년 2,495억, 2008년 3,272억으로 증가 추세이다(건강검진 사업 현황, 2009). 그러나 본 연구의 일반 건강검진 현황(2003-2007)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대상인원 및 수검율이 낮아 예산 지급에서도 성비 불균형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을 것

이라고 유추될 수 있어 성인지적 예산 성비 불균형 해소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방법 중 만 35세-39세사이의 여성, 특히 전업주부에게 일반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 중 만 40세 이상 기준을 만 35세 이상으로 낮추고 앞에서 언급된 신규 예산 금액을 마련하도록 하는 정책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기 건강검진으로 인하여 가정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만 40세 미만의 35세-39세의 전업주부가 건강하다면 가족 구성원 전체가 건강해지고 나아가 전체 사회 구성원의 건강 수준과 생산력이 증진될 수 있다.

참 · 고 · 문 · 헌

- 국민건강영양조사, 2007. 제 4기 1차년도 원시자료 이용지침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2006, 2007. 건강검진 결과보고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건강검진 자료, 만 35세-39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 인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건강 검진 사업 현황.
- 이원철, 2006. 건강검진 지침 개발 및 건강검진 제도 개선(III),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증진사업단.

웃자고 보는 예능 프로그램 속, 죽자고 까칠해질 수밖에 없는 은근한 성역할 고정관념의 현실

김 지 은 | 한국 여성의 전화 소식지 <베를 II> 편집위원

장면 1.

슬럼프 탈출을 위한 외출, 포켓볼을 배우고 싶다는 아내와 사색이 되어 절대 싫다고 하는 남편, 알고 보니 학창 시절에 포켓볼부였던 남편은 여자에게 처참하게 패했던 '트라우마' 때문에 포켓볼을 치러 가고 싶지 않아했던 것, 남편이 속마음을 말한다.

"솔직히 말해서 남자가 포켓볼도 잘 치고, 사구도 잘 치고 그래야죠, 제가 못하는 건 보여주지 싫어요."

캐스터들, 갑자기 전원 끄덕끄덕, 그리고 캐스터들이 입을 모아 동시에 말한다.

"남자들이(남자들의 마음이죠)... 맞아..."

결국 아내에게 포켓볼을 가르쳐주게 된 남편.

갑자기 무언가가 걸리는 듯 당황한다.

"근데 너, 너무.....이걸로 좀, 가리고 하자," 라면서 자기 겹옷을 꺼내주는 모습을 보고 캐스터들이 다시 입을 모아 말한다.

"그래, 그래, 오오" 그리고 자막 "내 아내 옷차림 단속하느니"

그리고 이어지는 한 여성캐스터의 발언, "저렇게 남자가 단속해주는 거 여자들은 좋아해요," 그리고 들려오는 다른 캐스터의 목소리, "어어...", "맞아."

장면 2.

운전면허학원에서 선생님과 상담 중인 가상 부부. 열심히 선생님에게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 아내를 묘한 시선으로 바라보던 남편이 급히 아내가 입은 티셔츠의 한 쪽 어깨를 끌어 올리며 말한다.

"어떻게 이렇게 입고 왔어요," 그리고 자막에 덧붙여진 말은, "가정이 있는데," "와이프 관리하는"

그리고 들려오는 캐스터의 말, "어우, 남자들은 진짜로 저런 거 싫어하는구나."

외국인등록증을 안 가지고 온 아내, 꼭 필요하다는 말에 약간 애교 섞인 말투로 "응...없으면 안 돼요?" 라고 하자, 그런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다. 그리고 자막, "다른 남자한테 어디서 애교를..." 그런 남편의 시선은 전혀 눈치 채지 못한 채로 열심히 서류 기입하느라 여념이 없는 아내, 말할 타이밍을 놓친 남편은 말없이 다시 아내의 옷만 '관리'한다.

운전 강습을 받기 위해 나가는 길에 "떨려요?"라고 물어보면서 다시 아내 옷매무새를 다잡는 남편. 아내는 그저 당황스러운 웃음만 터질 뿐이다. 그리고 들려오는 캐스터의 목소리,

"꼭 옷을 이렇게 올려준다?"

그리고 시작된 운전 강습. 아내가 차를 타고 나가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면 남편이 무언가를 발견한 듯 당황한다.

"저거... 티 올려야지,"

캐스터들의 반응은, "어어, 어께 나온다구.....", "안 봐! 안 봐!", "어우~, 저렇게 관리를.....", "괜찮아, 괜찮아," 그러다 결정적 한마디, "나는 남자친구가 저렇게 해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옷마다 다 찢어버릴 거야."

장면 3.

발리 여행 후 오랜만에 다시 만난 부부를 보며 캐스터들이 말한다,

"가인 씨가 점점 여성스러워지는 것 같아요.(점점 예뻐지는 것 같아요.) 순해지구."

그러다 인형에 메시지를 재녹음하러 간 가인의 목소리,

"야아!"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얘기한 것 같네요, 예전하시네요."

재회 기념 커플샷(?)을 찍는 모습을 보며 다시 캐스터가 말한다,

"어우, 가인 씨, 왜 저렇게 다소곳해졌어요."

장면 4.

아내의 땀을 닦아주는 남편을 보며 캐스터,

"(부럽다는 듯이) 밥도 먹여주고, 땀도 닦아주고..... 손 없어도 살겠다."

이 장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최근 방영된 MBC의 주말 버라이어티 <우리 결혼했어요 시즌 2-이하 우결>의 장면들이라는 것? 에이, 그렇게 단순할 리가 없지. 좀 더 생각해보자. 캐스터들의 목소리와 어조에 '부러움'이 섞여 있다는 것? 그렇다면 그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자를 챙겨주고 '단속해주는' (?) 남자가 자상하고 세심한 남자이고, 원래 성격이야 어찌하든 내 남편 앞에서는 점점 '다소곳하고' "예뻐지는 '여자의 변화가'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것? 그런데 그것은 과연 누구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일까?

내 이야기를 좀 해보겠다. 나라면 내 애인 혹은 남편이 내 웃차림에 대해 계속 신경 쓰면서 '단속'을

한다면 처음에는 좀 웃기다가 이내 짜증을 낼지도 모르겠고, 내 애인 혹은 남편 앞에서 다소곳해지고 순순해지는 것을 누가 '여성스러워진다', '예뻐진다'라고 말한다면 "도대체 여성스러운 건 뭔데요? 그럼 원래는 안 예뻐나요?"라고 되물을 것 같으며, 나를 살뜰히 보살피는 애인 혹은 남편을 보며 부러워하는 친구가 있다면 "나는 돌봐주어야 하는 어린 아이가 아니다."라고 말할 것 같다. 무엇보다 연애 혹은 결혼처럼 소위 '이성커플'의 관계에서 은근히, 무의식적으로 서로에게 기대하고 바라게 되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 '남자들은', 혹은 '여자들은' 이렇다, 라고 단정 지어 말하는 것 자체에 대해 '폭력적'으로 느낄 것이다. 아마도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게 '불쾌감'을 느끼는 나에게 "웃자고 보는 예능에 왜 죽자고 까칠하냐? 여자가 피곤하게."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런 말을 들어보기도 했다.

그러나 수많은 미디어 속의 목소리들은 때로는 의식적으로, 그러나 대부분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무의식적으로 "남자는 이렇고, 이래야 한다.", "여자는 이렇고, 이래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것을 '예쁘고, 사랑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포장한다. 지극히 나의 주관적인 판단일지 모르지만 '우결'이 가지는 진정한 문제점은 가상 결혼 생활을 통해 결혼 생활의 판타지만 보여준다는 것이나,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결혼 생활이 아닌 '아이들의 연애를 결혼으로 포장'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리얼' 버라이어티가 아닌 리얼 '버라이어티'라는 점도 아니다. 자막 혹은 캐스터들의 목소리를 통해 발화되고 전파되는 무의식적이고도 은근한 성역할 고정관념의 강화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우결'의 주 시청층 중 하나는 10대 청소년이다.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 중에는 심지어 <무한도전>은 안 봐도 되지만 '우결'은 꼭 봐야만 한다고 말하는

청소년도 있다. ‘우결’ 속 연기자들이 ‘스킨십을 했네, 안 했네’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그들이 부른 노래가 화제가 된다. 그들은 ‘우결’을 통해 연애와 결혼에 대해 드라마를 통해 얻는 것과는 또 다른 형태로 간접경험을 한다. 드라마는 결국 현실이 아닌 허구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지만, ‘우결’이 표방하는 것은 ‘리얼과 가상을 넘나드는’, 그래서 진짜일지도 모르는 연예인들의 반응과 심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우결’을 보면서 ‘만약 그들이 진짜로 부부라면, 혹은 진짜로 연인이라면 이러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프로그램을 소비하게 된다. 그 와중에 20대부터 40대까지의 결혼을 했거나 또는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연애 경험이 있는 캐스터들의 목소리는 마치 ‘우결’ 속 ‘가상 커플’의 모습에 공감하는 시청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처럼 들려온다. 즉 ‘가상 커플’이 보여주는 모습들 자체를 통해서보다 더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남자는 어때야 하고, 여자는 어때야 하는구나.’라는 메시지를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들이 전달하는 목소리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지 않고 그것이 마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인 양 전달하는 캐스터들의 목소리는 그래서 무섭다. 그리고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 캐스터가 대부분 기혼 여성이라는 점도 우려스럽다. 2008년에 방송을 시작하면서부터 ‘결혼 생활에서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라는 취지 아래 강수정, 김원희, 박미선 등의 기혼 여성 진행자가 캐스터의 역할을 수행해왔는데, 그들이 전달하는 메시지들은 지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음에도 마치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왔고, 또한 전달된 메시지들은 대부분 이미 고정되고 사회화된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형성되곤 했다. 그것은 단순히 캐스터들 개인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프로그램이 표방하

고 지향하는 무의식적 지점에 그들의 목소리가 맞아 아 있기 때문에 기혼 여성 캐스터를 통해서 ‘은근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전파되는 것이 당연시되는 것이다.

초창기 ‘우결’에서 초점이 맞춰진 부분은 ‘이것이 리얼이나, 가상이냐’의 영역을 넘나드는 설렘 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커플의 모습 속에서 흔히 생각하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성상’을 강조하는 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요리를 잘하고, 로맨틱한 노래를 불러주고, 아내의 발을 씻겨줄 줄 아는 알렉스와, 아내보다 살림을 더 잘하고, 귀여운 하트 춤을 춰주고, 가상 장인, 장모님에게 잘하는 앤디는 방송이 나갈 때 동시에 화제가 되고 많은 여성 팬들 사이에서 회자되면서 남성들로부터는 ‘지탄’ (?)과 ‘질투’ (?)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다음번엔 그들이 어떤 이벤트를 해줄 것인지, 다음번엔 또 얼마나 달콤한 말을 들려줄 것인지에 대한 기대만이 부각되었다. 동시에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살림은 하려고 들지 않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서인영은 ‘마녀’라는 별명을 얻게 되고, 살림을 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서툰고, 앤디의 말을 때로는 귀담아 듣지 않는 솔비는 철이 없지만 노력한다는 평가를 얻었다. 하지만 각 커플의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흥미롭고 재미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은 오히려 그들이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이 각기 다르고, 그렇게 다른 방식들을 어떻게 맞춰나가는지가 아니었을까. 사실 알렉스나 앤디가 여성 팬을 사로잡고 정형돈이 욕을 먹었던 이유의 본질은 단순히 로맨틱함이나 이벤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상대방의 말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대화하려고 애쓰는지가 아니었을까? 그런데도 그런 모습을 잡아내거나 커플 간의 역할에 있어서 조금은(초창기에는 가능한 한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 모습이 눈에 띄므로) 고정되어 있는 면에 대해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해줄 수 있었던 기혼

여성 캐스터들은 오히려 “여자들은 다 저런 거 좋아해요.”, “여자가 좀 이래야 하는데.....”라는 말로 스테레오 타입의 대변자박에 되지를 못했다. 예를 들어 크라운 J가 서인영에게 ‘어디로 갈 것이다.’라는 언질 없이 기차를 타고 인영을 대구로 데려갔을 때, 비 내리는 날씨에 자식처럼 아끼는 구두가 망가질지도 모르는데다가 좋아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야구를 마음의 준비도 없이 보아야 한다고 하고, 심지어 그 야구 경기마저 비로 인해 취소가 되어서 계속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상황에서, 함께 멀리까지 여행을 가야 하는 스케줄에 대해 상대방이 전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 막무가내로 자기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상대방을 끌고 온 크라운 J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지적하는 캐스터는 없고, 오히려 서인영의 구두를 찢지 않게 하기 위해 업어 주고, 짜증내는 서인영을 참아내는 크라운 J를 “자상하다.”, “잘 참는다.”라고 칭찬하고, “나는 좋은 취지였는데 인영이가 너무 화를 내니까 화가 나더라.”라고 말하는 모습에 “원래 참다 참다 화를 내는 것이 풀기 더 어렵다.”며 장단을 맞춰주는 캐스터만 난무한다. 사실 크라운 J의 행동은 어떤 의미로 상당히 ‘폭력적’이다. 상대방의 의향이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자신은 좋은 의도의 이벤트를 준비한 다면서 행동한 후, 그런 자신의 의도를 몰라준다고 화를 내는 것이니 말이다. 그런데 그렇게 ‘폭력적’일 수 있는 소통 방식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해줄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가진 캐스터가 오히려 ‘그래도 좋은 의도였으니 너무 화내지는 않았어도 된다.’거나 ‘양쪽 다 똑같이 잘못했다.’라고 시청자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특히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 식의 캐스터 중계 방식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결혼’이라기보다 아이

돌들의 ‘연애’에 가까운 모습 속에서 소위 커플들의 ‘밀당-밀고 당기기’ 라거나 스킨십 여부에만 관심을 표하는, 그러면서 은연중에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발언을 당연하다는 듯이 전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결’의 현실이다.

〈남자, 그리고 아내가 사라졌다〉라는 미션을 받고 당황하는 남성들의 모습에 이어, “살림: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자막이 나간다. 이어서 빨래나 식사 준비를 싫어하는 남성들의 모습과 퇴근 후 아내는 가사나 육아, 남편은 휴식을 선택하는, 가사노동 시간이 3시간 28분과 32분이라는 대조를 보이는 맞벌이 부부의 모습을 보도한 뉴스의 한 꼭지. 그리고 이어지는 한 맞벌이 남편의 ‘대부분의 가사 노동은 아내가 하고, 아내가 없을 때 식사 해결은 라면이나 배달 음식’이라고 말하는 인터뷰 모습. 그리고 ‘남편이 앞치마 두른 모습을 본 적도 없고, 세탁기도 돌릴 줄 모른다’는, 남편이 가전제품 A/S 기사인데 밖에서 고치는 건 하지만 집에서 고치는 건 말하면 6개월 정도 있다가 해줄까 말까’라는 아내의 인터뷰 모습.

그리고 이어지는 철모르는(?) 이경규 씨의 한마디. “야, 아내가 사라졌다.....대박인데!” 옆에서 거드는 신혼 이윤석 씨의 한마디,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시작된 KBS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의 미션 중 하나, 〈남자, 그리고 아내가 사라졌다〉.

프로그램을 보는 내내 배를 잡고 미친 듯이 깔깔대며 웃기는 했지만, 동시에 참으로 뒷맛이 씁쓸하고 아팠던 미션이다. 이미 제목 안에 내포된 전제이자, 현실 속의 많은 사람들이 깔고 있는 전제는 ‘살림, 혹은 집안일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아내의 몫이고, 아내가 전문가.’라는 것이 아닌가. 그 현실을 보여주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던 제작진의 의도는 충분히 다가왔고, 적나라하다 못해 웃기고, 웃기다 못해 슬프기까지 했던 연기자들의 살림

과의 고군분투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남성들을 ‘뜨끔’ 하게 만들었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1회성으로 끝나버릴 예능 속 미션이라는 것은 안타까웠고, 언제쯤이면 이런 이야기 자체도 필요 없는 날이 올 수 있을지 속상해졌다.

2년쯤 전, 강의 과제를 위해 10대 한 명, 20대 한 명, 30대 한 명의 비혼 남성을 선택해서 ‘가족 정책’에 대한 주제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인터뷰에 기여(?) 응해준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던진 질문 중에 하나는 ‘만약 당신의 아내가 결혼해서도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으며 가사와 육아는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뻘하고도 뻘한 것이었는데, 그 때 돌아온 답변들의 더욱 뻘한 공통점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나이와 상관없이 그들이 공통적으로 한 답변은 바로 ‘아내가 원한다면 일을 하는 것이고, 아내가 전업 주부로 살고 싶어 한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만약 맞벌이를 하게 된다면 (그 누구도 자신은 일을 안 할 것이라는 반응은 없었다) 아내를 많이 도와주겠다.’는 것이었다. 즉 그 안에 내포된 메시지들을 요약하자면 아내가 결혼 후에 직업을 가지고 말고는 선택의 문제이지만 자신이 직업을 가지는 것은 기본 전제이며, 가사와 육아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이다. 잠시 분노하여 녹음기를 정지시켜놓고 “가사와 육아는 공동의 일이지 어느 한 쪽이 어느 한 쪽을 도와주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장 연설(?)을 하고 나서 다시 인터뷰를 이어갔던 당시의 에피소드가 <남자의 자격-아내가 사라졌다> 미션을 보는 내내 머릿속에 맴돌아 있었다.

방송 당시 평균 나이 46.7세인 OB팀-이경규, 김태원, 김국진-은 “누가 일을 해!”, “결국 내가 하고 있다!”라고 버럭대다가 슬금슬금 YB팀-김성민, 이정진, 윤형빈, 이윤석-으로 가버리는 이윤석을 보며

“야, 진짜 아내가 사라졌다.”라고 푸념하는 이경규 씨의 모습을 시작으로 ‘극한(?)의 미션에 도전하게 된다. 김할머니 김태원이 장을 보러 나가면서 남기는 마지막 당부, “채널은 이거고.....”는 이경규와 김국진이 그동안 얼마나 ‘살림’이라는 것에 무지했었는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의 시작일 뿐이다.

삼치를 굽기 위해 오븐과의 고군분투를 시작하는 김태원, 청소기 사용법을 놓고 미친 듯이 토론하는 이경규와 김국진, 김태원, 심지어 청소기를 바르게 잡는 법을 몰라서 청소기가 잘못 만들어졌다며 투덜대는 김국진과 청소기의 코드 선을 한 번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스프링 정리되는 모습에 너무나 신기해하는 이경규의 모습은 마치 ‘저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온 것일까?’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처절하다. 섬유유연제가 뭔지도 모르고, 세탁기를 어떻게 작동시켜야 하는지도 모르는 그들은 그 정도로 ‘집안일’에 대해 무지한 것이다. 그들을 대신해서 집안을 운영하고 살림을 꾸려가 줄 누군가-아내 혹은 어머니-의 존재가 당연했던 그들에게 24시간 동안 서로의 아내가 되어주며 생존하라는 미션은 그토록 어려울 수가 없다. 온갖 가전제품의 발달에 “이제 여자들은 정말 편해졌다. 청소기가 청소해주고, 세탁기가 빨래 다 해주는데 살림이 뭐가 힘드냐?”며 여성이 거의 전담해온 가사 노동의 가치를 깎아내리기 급급했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살아온 그들은 <아내가 사라졌다> 미션뿐만 아니라 ‘육아’와 ‘요리’(어머니 밥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미션과, 남자-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나? 미션 등)에 대한 미션들을 수행하면서 내내 끙끙대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때로는 적반하장으로 “야, 내가 이렇게 먹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겠어?”라고 ‘버럭’ 하기도 하고, “엄마들은 저런 거 얘기 안하거든. 왜 마누라들은 저런 걸 얘기하지? 마누라는 친엄마가 아니라서 그런가?”(<남자,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냐 편> 중에서>라는, 아내가 들으면 기막히고 천인공노할(?)만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기도 한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항상 ‘가사 노동’의 어려움과 소중함에 대해 감사와 함께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반성의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가사 노동도 나의 일이다’라고 말하지는 못한다. 결국 일회성 이벤트처럼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다. 내가 해보지 않은 일들이고, 내 직업이 바쁘니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변명하듯 남겨지는 그들의 마지막 이야기는 그래서 안타깝고 그래서 아프다.

무언가 변화하고자 하는 것 같다가도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와버리는 느낌으로 미션 수행은 끝나고, 그들은 계속해서 어리바리 아저씨들의 또 다른 미션 수행을 통해 웃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정의된 ‘살림’에 무지한 이 아저씨들의 모습을 그저 어리바리한 남자들의 미션 수행기 정도로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져보려는 제작진의 노력은 분명 새로운 변화이다. 육아, 어머니 밥상의 재현을 위한 농사와 요리, 아내가 사라진 뒤 서로의 아내 되어 집안일 하기, 음식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니 직접 누군가를 위한 요리를 하면서 그 어려움과 소중함 알아보기 등, 나를 ‘성평등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남자의 자격’이라고 이야기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또한 그 미션들이 함의하고 있는 전제 중 하나는 ‘원래부터 당연히 남성도 해야 하는 일’ 이라기보다 ‘여성들이 힘들게 수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 재평가하고 도와주자’라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오빠라고 해도 될까요?”

“네.”

“그럼 오빠라고 불러주시죠.”

시청자 질문: 세 분 치마 입을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집에 치마는 몇 개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어, 지소연 선수, 치마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요?”

“그럼 여성스러운 옷 한 번 입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얼마 전 KBS <승승장구>에 여자 축구 대표팀의 지소연, 문소리, 김나래 선수가 나왔다. 대한민국 최초로 20세 이하 월드컵 3위라는 기록을 세운 국가대표팀의 대표로 나온 세 선수에게 MC들이 던진 말, 시청자의 질문 중에는 그들이 ‘축구선수’이기 이전에 ‘여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들이 있었다. 그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은 MC 중 한명이 “여성스러운 옷을 한 번 입어보고 싶지 않느냐”면서 ‘선물’로 ‘여성스러운 옷’을 준비해준 것이었다. 세 명의 선수들은 그 옷을 입을 걸 보고 싶다는 MC들의 부탁에 따라 ‘변신’을 하고 다시 무대 위로 나온다. 그 장면을 보면서 분명 그들이 ‘여성스러운 옷’을 입은 모습은 예쁘지만 만약 남자 축구대표팀 선수가 나왔다면 ‘남성스러운 옷’을 입고 나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까? 라는 생각에 씁쓸해졌다. 게다가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 자신보다 어린 남자 축구선수가 나왔다면 ‘형’이라고 불러달라는 발언을 했을지도 의심스러워졌다. 속으로 결국은 궁시령 거리게 되더라. ‘남자들은 하나 같이 왜 나이가 조금만 많으면 그 놈의 오빠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야?!”

지난 동계 올림픽이 끝나고 스피드 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인 이상화 선수가 SBS <절친노트 3>에 나왔을 때 느꼈던 씁쓸함과 비슷한 종류의 그 느낌. 그 방송에서 MC들은 계속해서 ‘의외로’ 여성스럽고 ‘의외로’ 악세서리를 좋아하는 이상화 선수에게 감탄을 하고, ‘철벽지’라는 별명보다 ‘꿀벽지’라는 별

명이 좋다는 이상화 선수의 이야기에 탄성을 자아냈다.

이처럼 여성 스포츠 선수에 대해 방송은 그들의 ‘숨겨진 여성성’을 찾아내려 애쓰고, 그들이 ‘여성스러움’을 드러내면 감탄하면서 강조하곤 한다. 남성 스포츠 선수에게 일부러 ‘남성성’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는 거의 볼 수가 없는데 말이다. 즉 이미 스포츠라는 영역 자체를 ‘남성적’인 것으로 규정한 후, 그 영역에 ‘도전’하고 ‘남성 못지않은’ 성과를 올린 선수에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경향성은 예능 프로그램으로 올수록 더욱 강화된다. 마치 예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맥락을 지닌 대조적인 예는 김연아 선수와 장미란 선수에 대한 미디어의 태도이다. 피겨 스케이팅을 ‘여성적’이고 ‘예술적’인 스포츠로 규정하고, 역도를 ‘남성적’인 스포츠로 규정한 뒤, 여성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김연아와 ‘남성적인 힘’을 드러내는 장미란을 다른 형식으로 다루는 동시에 그들의 외모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룬다. 그 안에는 “여자는 예쁘고, 가냘프고, 다정다감하고, 부드러워야 한다.”라는 식의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

사실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예능 프로그램들이 이들 뿐만은 아니다. 최근 더욱 이슈화 되고 있는 ‘걸그룹’ 멤버들에 대한 성상품화의 문제라거나, 여성 버라이어티의 성역할 고정관념의 문제는 밤을 새워 이야기해도 모자랄 정도이다. 다만 최근 흥미 있게 보았거나, 기대하는 바가 컸던 몇몇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을 뿐이다.

매스미디어는 사회를 반영하는 동시에 사회를 변

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존재이다. 그 사회가 지향하는 보편적인 이상형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그 이상형에 대해 비판하고 새로운 모습을 제시할 수도 있는 힘을 가진 것이다. 미디어가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모두가 인정하는 점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비판의식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진행할 것인지는 중요하며, 그것이 그저 ‘웃자고’ 만들고, ‘웃자고’ 보는 예능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그 영향력을 가볍이 여길 수 없다. 사실 이것은 남성 제작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때로는 ‘우결’ 속의 기혼 여성 캐스터들처럼 여성이 진정한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성차별적인 언사를 행하기도 한다. 벨 훅스가 이야기했듯이 페미니즘의 적은 남성이 아니라 성차별주의이다. 지금 내가 성차별적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미래를 살아갈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미디어 속의 성별 고정관념을 비판하고 타파해나가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미디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까칠하다고, 피곤하게 한다고 욕을 먹어도 예능 프로그램 하나, 그저 웃자고 보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남자의 자격>의 미션들처럼 분명 변화의 조짐은 찾을 수 있다. 거기서 더 나아가주기를 채찍질하는 시청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변화의 흐름이 더 급물살을 탈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젠가는 웃자고 보는 예능, 정말로 마음껏 웃으면서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